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Vol.2

No.3



— 읽을거리 [그곳에, 말을 걸다]

05 광주·전남 첫 기념 조각 <성장 을지문덕상(聖將 乙支文德像)>_ 김허경

— 더함 포커스_ 정책칼럼

11 기후위기 시대, 성장 중심 그린뉴딜을 넘어_ 김태호

27 포용적 관점의 그린뉴딜 실현 방안_ 윤희철

41 페미니즘 출산 정치의 모색을 위하여_ 김경례

— 책소개

52 소년이 온다(저자: 한강)_ 정대근



01 기후위기 시대, 성장 중심 그린뉴딜을 넘어_김태호

티핑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등장한 그린뉴딜의 확산은 매우 긍정적이나 여전히 성장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때 유행하다 사라지는 정부 정책으로 종료되거나 그린워시(Greenwash)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의 해법으로서, 그리고 성장 중심의 그린뉴딜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한다.

02 포용적 관점의 그린뉴딜 실현 방안_윤희철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난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그린뉴딜이 등장했다. 그린뉴딜은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과연 그린뉴딜이 경제와 사회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 글은 포용적 관점에서 그린뉴딜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제안한다.

03 페미니즘 출산 정치의 모색을 위하여_김경례

출산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거나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사건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 기술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엄청난 노고를 필요로 하는 재/생산 노동이며, 동시에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은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주요한 참여 주체이다. 따라서 임신의 준비 단계부터 출산 과정, 출산 이후의 보육 및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별도의 출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더함 경제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더함 포커스』는
시민활동가 샘치과 손정수원장님의 사랑하는 배우자였던
(故)장은주님을 추모하는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주·전남 첫 기념 조각
〈성장 을지문덕상(聖將 乙支文德像)〉

김허경(Kim Heo Kyung)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강의교수
nowandher@hanmail.net



차근호, 〈성장 을지문덕상(聖將 乙支文德像)〉, 1953

서양 조각이 한국화단에 도입된 것은 동경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한 김복진이 귀국한 1925년경이다. 하지만 조각은 회화와 달리 불상이나 석물을 다루는 장인들의 육체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에 부딪혀 뒤늦게 미술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근대기 초상조각은 두상, 흉상, 전신상의 형식을 갖추고서 비로소 공간에 놓인 시각조형물로 받아들여졌다. 이 중 기념조형물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난극복을 고취하기 위해 공적 공간에 세우면서 등장하였다.

최초의 기념 조각은 1952년 해군본부인 진해에 세운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이다. 1952년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 시설로 출범한 상무대도 동상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듬해 상무대 육군보병학교는 「정훈화보」를 통해 진해 해군부대에서 윤효중에게 작업을 맡겨 이순신 동상을 세운다는 기사를 접하

자 호국정신을 표상하는 인물인 을지문덕 장군을 내세워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했다.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2011)에 의하면 육군보병학교는 을지문덕의 상무정신을 이어받아 호국정신의 사표로 삼기 위해 장병들의 성금을 모았고 이를 기반으로 차근호가 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 을지문덕상>의 실질적인 제작은 한국전쟁기 상무대에 근무했던 목포 출신의 탁연하와 평양미술학교 조각과 출신으로 월남한 박제소, 차근호가 함께 제작하였다. 당시 작가선정은 공모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각자 밑그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차근호 안이 채택되었던 까닭에 탁연하와 박제소는 조수 역할을 자처했고 부산에서 피난 중이던 김찬식, 김순득까지 합류하였다.

이들은 제작 기한에 맞추기 위해 광주 금동 최부자집(구 남도극장 자리)를 작업실로 빌려 소조상 제작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4개월째 접어들어 흙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주물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까지 감내해야 했다.



〈을지문덕상 제작고증위원회 모습〉, 1952

1953년 11월 28일, 마침내 <성장 을지문덕상>은 대형옥의 조각상의 위엄을 드러내며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일반인들에게 선보인 <성장 을지문덕상>은 왼손으로 장도를 쥐고 오른손을 들어 진군을 명령하는 자세를 취한 3.5 미터 높이의 청동 환조였다. 동상은 이상적인 인체비례보다 사실성에 근거하여 갑옷과 무기를 세밀하게 표현함으로써 장군의 강직한 모습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인체의 팔다리가 짧아 사지의 비례와 동작이 다소 미숙하게 보이지만 팔의 근육과 오른발을 앞으로 내민 자세에서 늠름한 무인상(武人像)의 기백이 넘친다.

광주 상무대에서 제막식을 가진 <성장 을지문덕상>은 40여 년간 그 위용을 자랑했으나 1994년 육군보병학교가 전남 장성군 삼서면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함께 이전되었다. 현재 역사관 옆에 자리한 동상은 제작 당시 청동의 함량이 적었던 탓에 붉게 산화되어 있지만,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흥미롭게도 상무대의 을지문덕 장군 동상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을지문덕(乙支文德)엽서>(1954~1956)에서도 발견된다. 당시 액면가격 5환으로 살 수 있었던 이 엽서는 간단한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누구나 쉽게 안부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처럼 동상은 우편엽서에 등장할 만큼 시대적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차근호



〈동상설치 및 제막식 준비〉, 1953.11.28



〈을지문덕(乙支文德)엽서〉 부분, 발행일 (1954.11.27), 한국조폐공사

규모 기념 동상들을 다수 제작하였다.

광주·전남 첫 기념 조각인 〈성장 을지문덕상〉은 육군의 호국정신을 표상하는 위인 동상이라는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전후 혼란기를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했던 한국 현대조각 1세대의 예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를 비롯하여 제작에 참여했던 조각가들이 한국현대조각의 발달 및 전개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차근호의 행적을 살펴보면, 동상제작 이후 곧바로 항일시위를 기념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1954)을 제작하였다.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자리한 기념탑은 1929년 일제에 대항하여 쫓겨났던 학생들의 모습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제작한 저부조와 함께 초기의 독립운동기념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는 서울로 근거지를 옮겨 '차근호 조각연구소'(1959)를 개소할 만큼 의욕적인 활동을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기념조형물제작이 특정 작가들에게 집중되는 소외 현상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1960년 세상을 등짐으로써 미술계에 큰 충격을 남겼다. 망우리 이중섭의 묘비(1957)를 제작하기도 했던 차근호는 지금까지 이중섭 고향의 후배이자 비운의 조각가로 회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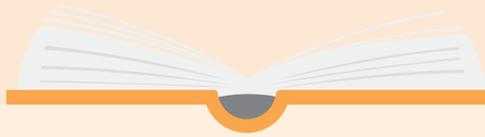
동상제작을 계기로 광주와 인연을 맺은 김찬식은 탁연하, 박제소가 서울로 올라간 뒤에도 광주에 남아 중앙초등학교 창고에서 작업을 지속하였다. 한창 작업에 몰두했던 그는 1954년 6월 광주미국공보원에서 개인전을 열어 20여 점의 석고 작품을 전시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김찬식 조각전》은 광주에 선보인 첫 조각 개인전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역 화단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탁연하는 서울에 상경한 후 홍익대학교 조각과에 편입하여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는 진해의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을 제작했던 윤효중과 제자로 만나 각종 기념 조각의 건립에 참여하며 역량을 발휘하였다. 그는 광주공원의 〈어린이헌장탑〉(1959), 〈4.19학생 의거 기념탑〉(1961), 목포유달공원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1974)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정책칼럼



1. 기후위기 시대, 성장 중심 그린뉴딜을 넘어_김태호
2. 포용적 관점의 그린뉴딜 실현 방안_윤희철
3. 페미니즘 출산 정치의 모색을 위하여_김경례

기후위기 시대, 성장 중심 그린뉴딜을 넘어

김태호(Kim, Tae Ho)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전략기획실장

babodanet@hanmail.net

티핑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등장한 그린뉴딜의 확산은 매우 긍정적이나 여전히 성장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때 유행하다 사라지는 정부 정책으로 종료되거나 그린워시(Greenwash)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의 해법으로서, 그리고 성장 중심의 그린뉴딜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한다.

키워드 : 기후위기, 그린뉴딜, 코로나19, 탈성장, 그린워시,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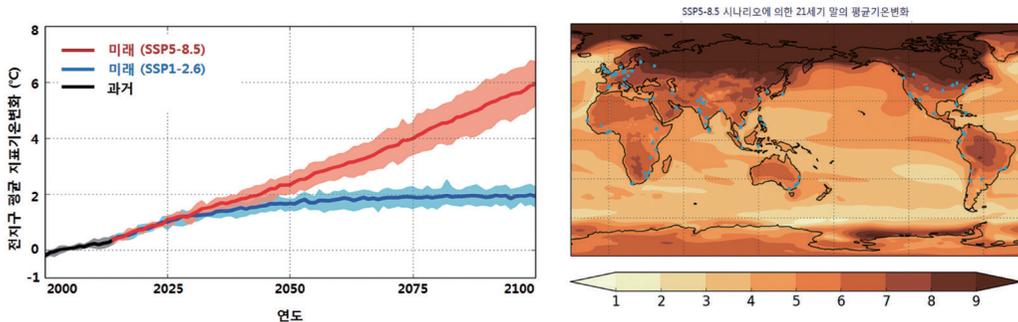
1. 되돌아 올 수 없는 기후위기¹⁾의 가속화

1)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 티핑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는 기후위기

- 2018년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약체(이하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와 산업활동으로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이 0.87℃ 상승했고 이르면 2030년 쯤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전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극한고온,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온난화 속도와 규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 달성을 권고함
- 세계기상기구(WMO)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2015~2019년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보다 1.1℃ 상승하였고,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평균농도가 2019년 말에 410ppm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보여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됨
- IPCC의 신규 온실가스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동사회경제경로)를 고려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 대비 +1.9 ~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름철 북극 해빙은 21세기 중반 이후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모의됨
 - 21세기 말 주요 도시의 기온 상승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0.8 ~ 4.5℃, SSP5-8.5 시나리오에서 +3.3 ~ 10.2℃ 상승 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림 1 | 전지구 평균기온 변화 및 21세기 말의 평균기온 변화



주. (좌) 현재기간(1995~2014년) 대비 2000~2100년의 연도별 전지구 평균기온 변화(°C) / (우) SSP5-8.5 시나리오에 따른 현재 대비 21세기 말의 평균기온 변화(°C)와 주요 도시(청색 점)
 자료 : 국립기상과학원(2019),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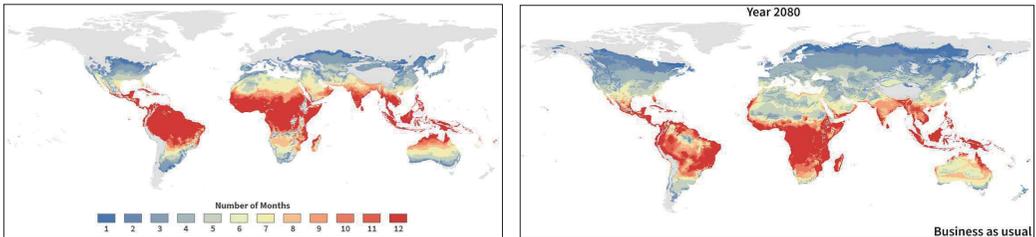
1)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는 이제 기후시스템과 인간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음

- 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오를 경우를 인간이 기후를 통제하기 불가능해지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특정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더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기를 뜻함)라고 지적하였는데, 영국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가 이미 지났다’²⁾고 충격적인 경고를 하였음
 - 현재 티핑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후시스템은 ‘영구 동토층’의 광범위한 해빙과 서남극 빙상 및 아마존 열대우림의 손실이며, 이들은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근접한 상태로 분석됨
 - 문제는 티핑포인트에 근접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치명적인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영구동토가 녹으며 75년 전 탄저균에 감염된 순록이 땅 위로 드러나 주변을 오염시키면서 12세 소년이 사망하고 순록 2,300마리가 폐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음³⁾

■ 코로나19(COVID-19)와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의 역할

- 최근의 감염병 발생과 확산은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은 박쥐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과 인간 사회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면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거나 기온 및 해수 온도 상승, 강우 패턴 변화, 습도 상승 등으로 감염병 발생과 전파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악화가 우려됨. 이에 기후위기의 파국적 진행을 막거나 완화해야 함
 - 지구온난화로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의 질병을 전파하는 모기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그림 2 | 세계 지역별 이집트 모기 서식 기간 : 현재(좌) 및 2080년(우)



자료 : <https://earth.stanford.edu/news/how-does-climate-change-affect-disease#gs.5ec5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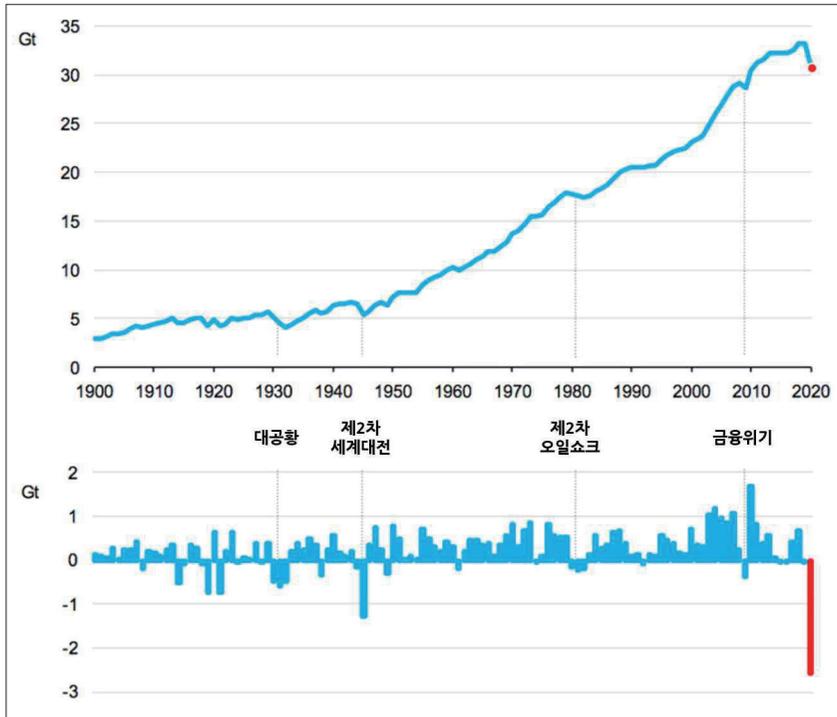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봉쇄조치로 인해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음
 -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하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60년 만에 수질이 개선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봉쇄 기간에 중국 내 이산화질소는 40%,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 정도 감소하는 등 세계 도처에서 고질적인 수질오염이 개선되고 생태계도 회복되는 등 환경 개선이 관측되고 있음. 다만, 이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부수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2) 영국 과학자들 충격 경고 ‘기후위기 ‘티핑포인트’ 이미 지났다’(프레스시안, 2019.11.28.)

3) “빠르게 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판도라의 질병 상자’ 열리나”(문화일보, 2019.7.19.)

-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린 지구탄소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 국제공동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올 4월 20일까지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17%까지 줄었다고 하며, 이중 절반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함
-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19년 대비 6%, 전력 수요는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70년을 통틀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 줄어들 것으로 전망⁴⁾하였음. 이는 작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탄소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명시된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간 매년 필요한 탄소 감축량과 일치함

| 그림 3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탄소배출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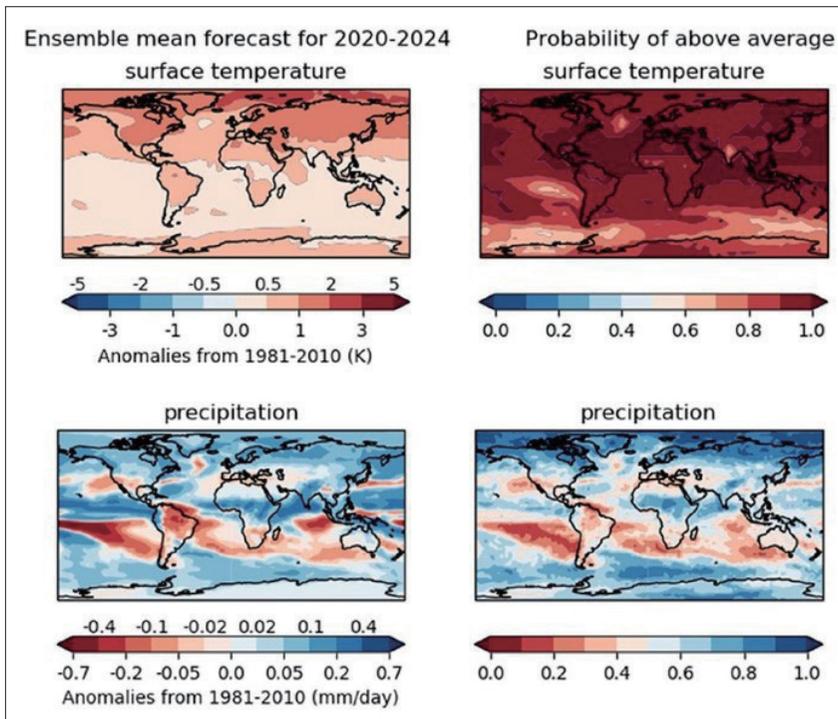
주. (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 (아래) 연간 변화 ※ 단위 : GtCO₂
 2020년 예상 수준은 빨간색, 다른 주요 사건들은 이번 배출량 감소 규모 체감을 위한 참고용
 자료 : 카본브리프(Carbon Brief), "IEA : Coronavirus impact on CO₂ emissions six times larger than 2008 financial crisis"(2020.4.30.),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4) 국제에너지기구(IEA), 『2020년 글로벌 에너지 리뷰(Global Energy Review 2020)』, 2020년 5월

■ 하지만,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와 근본적 전환 필요

- 2020년 6월 5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Mauna Loa) 측정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발표함
 - 마우나로아 측정소에서 5월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1ppm으로 5월 수치로서는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월보다 2.4ppm 증가한 수치임
 - 전 지구 이산화탄소의 월평균 농도가 400ppm을 돌파한 해는 2015년이며, 400ppm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높은 수치임. 우리나라는 충남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3년 400ppm을 넘어섰으며, 지난 10년간 관찰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평균 2.4ppm 증가하였음
- 세계기상기구(WMO)의 최근 보고서⁵⁾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2024년까지 연평균 1.5℃의 온난화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는 눈 앞에 다가온 상황임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하루 17메가톤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어 WMO가 보고한 것처럼 일시적 감소는 최대 0.1도의 차이를 만들 뿐이며, 페테리 타알라스(Petteri Taalas) WMO 사무총장은 “대기 중 CO2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올해의 실질적인 배출 감소로 인해 대기 중 CO2 농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⁶⁾

[그림 4] 1981~2010년 대비 2020~2024년 이상에 대한 기온 및 강수량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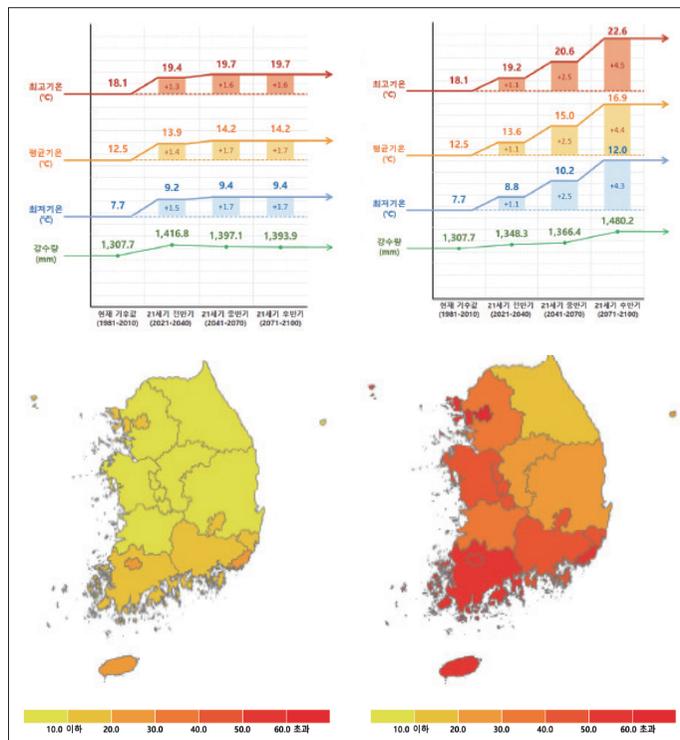
주. (좌) 앙상블 평균 (우) 평균 이상의 확률
 자료 : 세계기상기구(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5) 세계기상기구(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0. 7)

6) WMO(세계기상기구), “2024년까지 평균기온 1.5도 상승, 코로나도 일시 정지효과 없다”(더사이언스플러스, 2020.7.11.)

-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최근(2011~2019년)이 과거(1912~1920년)보다 1.8°C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86.1mm 증가하였으며,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른 21세기 말(2071~2100년) 기후전망은, 평균기온이 현재(1981~2010년) 대비 +1.7 ~ 4.4°C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은 현재 대비 +6.6 ~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온상승에 따라 고온 관련 극한기후지수는 증가하고 강한 강수 증가, 약한 강수는 감소하여 강수의 양 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 미래에도 폭염·열대야·여름일수와 같은 고온 극한기후지수 증가, 한파·결빙·서리일수와 같은 저온 극한기후지수는 감소하고, 5일 최대강수량, 강수강도와 같은 호우 극한기후지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5 |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에 따른 기온-강수 변화(위) 및 21세기 후반기 폭염일수(아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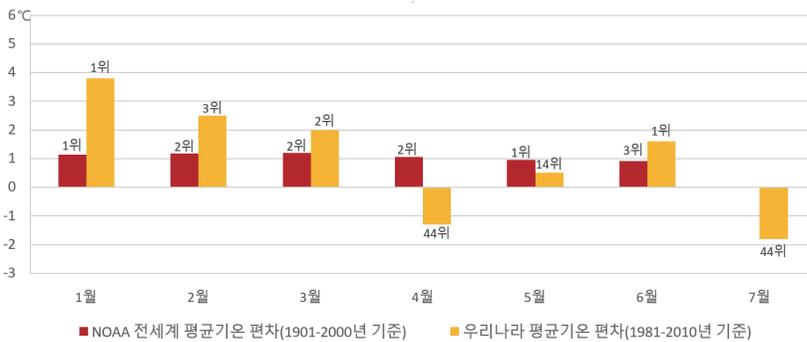
주. (좌) 온실가스 저배출 시나리오(RCP2.6) (우)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RCP8.5)
 자료 :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2018년

- 전 지구 및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한반도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10년(2010~2019년)의 연평균 기온의 평년값(1981~2010)에 비해 0.5°C 높았으며, 2014년 이후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해가 없었음
 - 폭염일수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 일수(33°C 이상)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10년대에는 평균 15.5회를 기록함(1980년대 평균 9.4회 → 1990년대 평균 10.9회 → 2000년대 평균 10회)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의 증가로 지난 10년간 과거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였음
 - 폭염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그 강도가 강화되고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함. 특히, 2018년 여름철 폭염/열대야일수가 111년 관측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여 국가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였음

- 온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초반 길고 강한 한파가 발생하였으며, 단기간 지역적으로 집중 호우가 빈번해지는 반면, 장기적으로 가뭄(2015~2017)이 발생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여름철 이상기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올해 6월에 때 이른 폭염으로 역대 1위를 기록한 반면 7월에는 매우 선선(44위)하여 이례적으로 7월의 평균기온(22.7℃)이 6월(22.8℃)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1973년 이후 처음 나타남
 - 올해 1월부터 7월 평균기온은 역대 3위(12.7℃, 평균 11.6℃)이며, 월 평균 기온은 1~3월과 6월에 역대 1~3위를 기록하였으나, 4월과 7월은 44위를 기록하면서 월별 기온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났음, 반면, 전세계 금년(1~6월)의 평균기온(평균편차 1.07℃)은 역대 2위(1위 2016년 평균편차 1.12℃)이며, 1~6월 동안 지속적으로 1~3위를 기록하고 있음⁷⁾

〈그림 6〉 2020년 전세계(1~6월)/우리나라(1~7월) 월별 평균기온 평년편차 시계열 및 역대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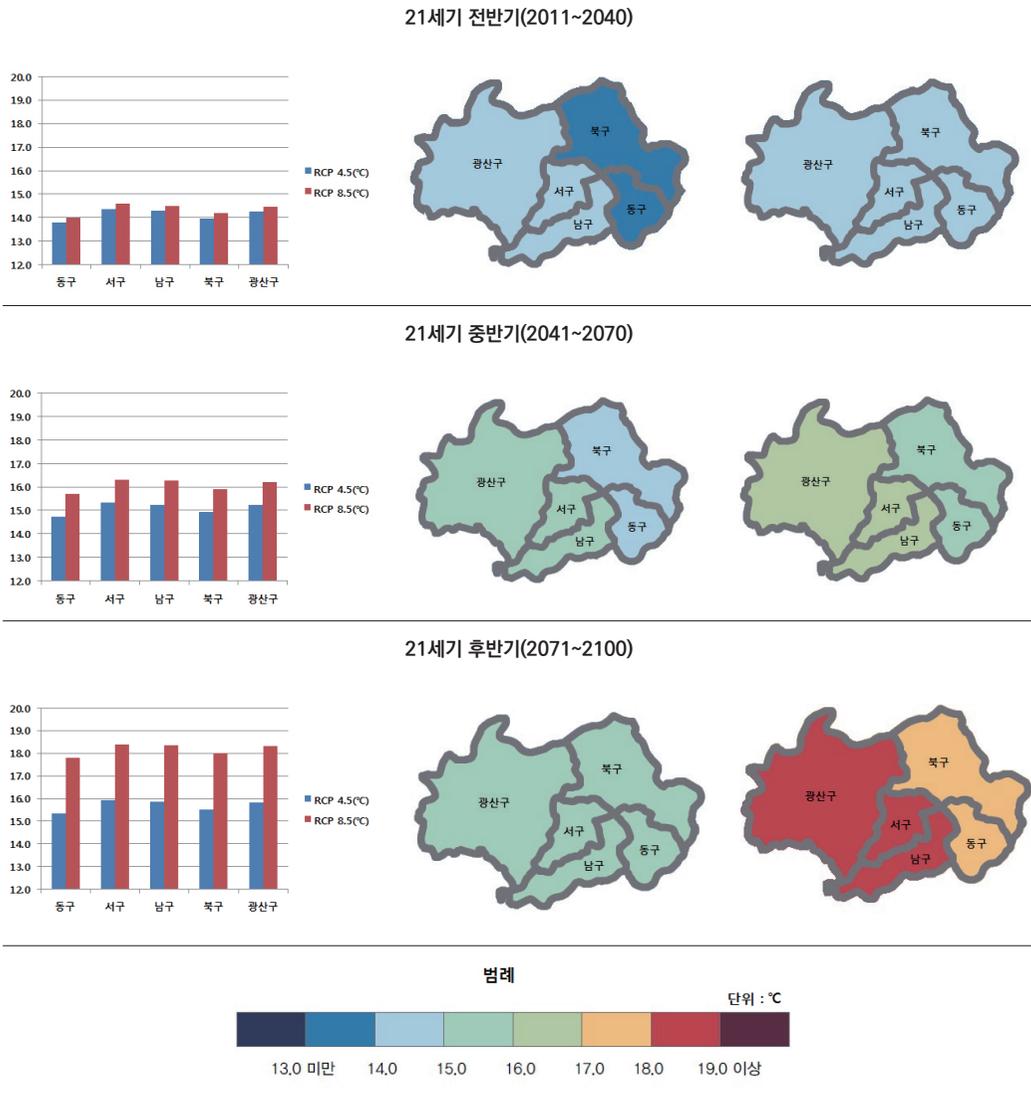


자료 : 기상청,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 및 지구 기후전망", 2020.8.13

- 2021년 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으로 감축)를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세계 7위 수준임.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1인당 13.8톤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13.8톤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함
 -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7억 914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최대 배출량을 기록하였던 2013년의 6억 9670만 톤을 넘어섰음
 - 저먼워치(German Watch)가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한국은 전체 61위 중 58위로, 지난해 57위에서 한 단계 떨어져 기후변화대응 성적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음
- 광주광역시시는 2010년 이후 연평균기온이 이전 50년(1960~2009년)보다 약 1℃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폭염 평균일수는 21.7일, 열대야 평균일수는 21.8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폭염 평균일수는 1991~2009년 12.5일에서 2010~2019년 21.7일로 9.2일이 증가하고, 열대야 평균일수는 1991~2009년 12.8일에서 2010~2019년 21.8일로 9.0일이 증가하였음
 - 폭염 평균지속일수도 1991~2009년 5.2일에서 2010~2019년 11.7일로 2.3배 증가하여 도시 온열현상으로 인한 생활·건강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7) 기상청,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 및 지구 기후전망", 2020.8.13.

| 그림 7 | 광주광역시 연평균 기온 전망 RCP4.5(좌), RCP8.5(우) ⑧



자료 : 광주광역시, 「제2차 광주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6년

-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연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21세기 중반기에 1.6℃, 후반기에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 배출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대비 21세기 중반기 2.1℃, 후반기에 3.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즉각적이며 강력한 추진여부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연평균기온은 현재보다 21세기 중반기 0.5℃, 후반기 1.8℃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래 폭염일수는 우리나라 평균 폭염일수에 비해 29.8일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됨

⑧ RCP4.5(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8.5(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표 1 | 광주광역시 현재 기후값 대비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의 변화량(RCP 8.5)

구분	평균 기온 (°C)	최고 기온 (°C)	최저 기온 (°C)	강수량 (%)	폭염 일수 (일)	열대야 일수 (일)	한파 일수 (일)	호우 일수 (일)	5일최다 강수량 (%)
우리나라	+4.1	+4.3	+3.9	+9.0	+25.3	+41.5	-5.0	+0.3	+25.5
광주광역시	+3.9	+4.2	+3.6	+12.5	+55.1	+52.3	-0.7	+4.1	+35.2

주. RCP 8.5 :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나리오
 자료 : 기상청,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2018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9,359.6천톤CO₂eq.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2017년 에너지부문 연평균 증감률은 약 1.9%, 비에너지부문의 경우 약 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10년 이후 8년 만에 5.8%가 증가하였음
 - 발생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송(29%), 상업(20%), 가정(20%), 산업(19%), 폐기물(5%), 공공 및 기타(4%) 순으로 나타나며, 건물 부문(가정과 상업의 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증가 추세였으나, 기후변화대응시책 추진, 인구변화, 경제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2013년 이후 정체된 상태임
 -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3년간(2008~2020년)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은 6,533천톤CO₂eq.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4%에 해당되는 양이며, 2030년 배출전망치의 56.4%에 해당함. 매년 평균 감축량은 503천톤CO₂eq로 2010년 배출량의 5.7%에 해당되며, 2020년 배출 예상량의 6.6% 감축이 예상됨

표 2 |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배출량	8,098	8,264	8,842	8,796	8,907	9,371	9,347	9,210	9,308	9,279
배출량 증감률(%)	1.3	2.1	7.0	-0.5	1.3	5.2	-0.3	-1.5	1.1	-0.3
1인당 배출량 (tCO ₂ eq.)	5.64	5.72	6.02	5.95	6.00	6.30	6.26	6.18	6.25	6.25

자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 『2019년 광주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배출특성 연구보고서』, 2019

2. 기후위기 인식 확산에 따른 그린뉴딜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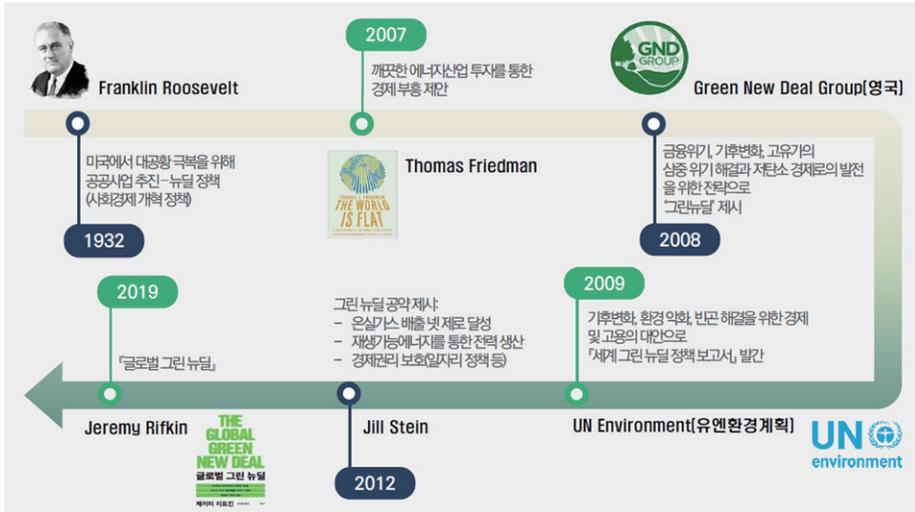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티핑포인트의 도래 임박이라는 현실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이 확산되고 있음
 - 스웨덴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시위 전 세계로 확산. 2019년 3월 15일 집회에 128개 국가, 2,333개 도시에서 청소년 140만 명이 참여. 영국에서는 시민들의 ‘멸종 저항’행동이 활발해지고 있음⁹⁾
 - 전 세계 153개국 11,258명의 과학자들은 국제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BioScience)’에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지구가 파멸적 위기(Catastrophic threats)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후비상 상황(Climate emergency)’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의제로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머리를 맞댄 지 꼭 40년 만에 나온 것임¹⁰⁾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 지구 위험 보고서(2020.1)’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기후행동 실패’를 선정함
 -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는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 메시지로 “코로나1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이고 끔찍한 것.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라는 모닝콜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환경위기는 더 깊은 비상사태(deeper emergency)”라고 강조함(2020.4.)
 - 전 세계 25개국 1,216개 지자체 기후비상사태 선포, 해당 인구는 7억 9천 8백만 명에 달함(2019년 12월 27일 기준). 11월 28일, 유럽의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할 것을 촉구함(이유진, 2019)
 - 우리나라 또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함. 단체인원이 공식인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지자체이며, 이는 세계 최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임.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가 지방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행,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와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음¹¹⁾
- 그린뉴딜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등장하여,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 유럽연합(EU)의 기후 비상선언과 그린 딜 발표,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기후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음
 - 뉴딜(New Deal) 정책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 로즈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했던 적극적 시장 개입 정책으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설립, 긴급은행법 제정 등을 시행한 정책이 최초의 뉴딜 정책이었으며, 미국의 뉴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 기후변화, 고유가의 삼중위기 해결과 저탄소 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이 제시되었으며, UN환경계획은 2009년 기후변화, 환경약화, 빈곤해결을 위한 경제 및 고용의 대안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함

9) 이유진, 『그린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국토연구원, 2019.12.

10) “지구기후 비상사태” 153개국 과학자 1만1천명 시국성명 (연합뉴스, 2019.11.6.)

11)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세계 최대 규모 (동아닷컴, 2020.6.5.)

| 그림 8 | 그린뉴딜의 등장과 역사



자료 : 윤재용,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 그린뉴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5.18.

-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목표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코로나 이후 그린딜(2050년 탄소중립국가 달성, 10년간 1조 유로 공공투자)을 핵심과제로 지속 추진하기로 발표(2020.3.17.)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당시 그린뉴딜 적극 추진, 트럼프 집권 후 폐기된 것을 바이든(1.7조 달러 투자) 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부활시킴
-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의원 9명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Alexandria Ocasio-Cortez 2019)
 - 결의안은 총 14쪽이며, 1.5도 IPCC 특별보고서로 시작해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문제에 대해 강조.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50년에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함. 결의안은 2014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경제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면 기후변화 정책이 주류화된 유럽에 그린 뉴딜을 표방한 미국까지 가세해 온실가스 넷 제로를 위한 세계 경제전환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 큼
- 지난해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들의 연합체인 C40 기후리더십그룹 시장총회에서 글로벌 그린 뉴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그린뉴딜로 도시 산업, 건물, 교통, 폐기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1.5도 이하 안정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기후위기 고려, 가장 영향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망 구축,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함(서울시도 그린뉴딜지지 선언에 동참)
- 유럽은 EU 20-20-20 프로토콜¹²⁾ 선언 이후 전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출범, 화석연료 100조 달러 좌초자산¹³⁾ 문제의 대두 등을 거친 후 2019년 EU 집행위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을 제안하

12)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율 20% 달성, 에너지 효율 20%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이 프로토콜의 핵심이며,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세계가 탄소 후 문명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선언

13) 좌초자산 :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게 되는 화석연료와 방치되는 송유관과 해양 플랫폼, 그리고 화석연료 문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산업의 의미함

고 2020년 1월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함

- 기후변화대응이 늦어질 경우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선도자(first mover)로 신경제의 표준을 선점하여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¹⁴⁾
- 유럽의 그린딜은 2030년 감축 목표를 최소 50%, 최대 55%로 조정(이전 계획 최소 40% 감축)하고, 2050년 넷 제로(Net Zero)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EU와 동일한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이후 EU 집행위는 7,500억 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계획안을 발표(2020.5.27.)하였는데, 계획의 초점은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있으며, 계획안에 '그린딜'을 포함하고, 모든 지원은 녹색전환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는 녹색 조건이 붙으며, 예산의 25%가 기후친화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정부는 지난 5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로 함. 현 정부 그린뉴딜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그린 경제 가속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임

-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임. 그린뉴딜로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를 추구한다고 밝힘(제7차 국가경제회의, 2020.7.14.)
-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 부각이라는 배경으로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입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일자리 66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의 경우 녹색전환의 목표인 탄소중립의 시점이나 탈석탄, 탈내연기관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와 그린뉴딜의 핵심요소인 분배와 형평성 문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부문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여전히 개발사업, 부족한 재정투입, 에너지 가격·세제개편과 같은 제도 개선 부재,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가 없이 추진됨으로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분석과 개선 논의는 확장될 것으로 보임¹⁵⁾

■ 광주광역시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에 맞춰 광주형 AI-그린뉴딜 비전보고회(2020.7.2.1)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과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함

- '정의로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그린뉴딜 목표로 하는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2020.8.19.)
- 글로벌 그린공동체가 함께하는 녹색전환도시,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미래형 환경융합산업 메카 녹색산업도시라는 3가지 추진방향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45% 감축,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

14) 이혜경,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29.

15) 이유진, 「지역기반 그린뉴딜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포커스>, 2020.7.31.

- (Green Democracy) 시민 주도 에너지 분권 실현, (Green Energy)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Green AI Infra) AI 연계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기후안전 녹색인프라 강화, AI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 깨끗한 물환경 인프라 구축, 청정대기·공기산업 등 환경융합산업 육성, 기후환경 일자리와 시민 참여 확산이라는 8대 과제로 설정하였음

3. 성장 중심 그린뉴딜을 넘어서

-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이라는 방향에서 '경제 위기'의 해법인 반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의 해법으로서 전환(Transition), 회복(Restore), 공생(Symbiosis)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뉴딜은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그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토목 건설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후 기후위기 및 불평등 심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등장한 그린뉴딜은 코로나19 대응과 결합하면서 초기 그린뉴딜의 개념에서 보다 확장된 측면이 있지만 녹색성장이나 그린뉴딜 모두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이나 경제 부흥 정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의 차이

구분	녹색성장(Green Growth)	그린뉴딜(Green New Deal)
추진배경	에너지·자원 효율성, 환경부하 최소화, 신성장 동력	기후위기 및 불평등 심화,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결합)
개입방식	시장 주도형 정부개입	정부 주도형 시장개입
중점분야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너지 효율화 등)	기후변화대응(감축 및 완화 통합)
투자중심	녹색산업 성장 중심	인프라 중심(에너지, IoT, 교통)
기술기반	녹색 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휴먼기술)
주요목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 물론 그린뉴딜은 현실적 대안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지만 철저하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최초의 뉴딜은 양적인 일자리 확대와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위기라는 한가지 목표를 달성함. 하지만, 그린뉴딜은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환경성'과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 의 기준이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환경정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원칙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함. 때로는 성장을 버릴 수도 있는 과감한 정치적 선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함

■ 그린뉴딜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잘못된 방향으로의 그린뉴딜은 오히려 그 목적을 상실하고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한때 유행하다 사라지는 문제인 정부의 정책으로 종료되거나 그린워시(Greenwash)¹⁶⁾로 평가받을 수 있음

- 그린뉴딜의 첫 번째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여야 함. 그린뉴딜의 다양한 사업은 모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및 공동체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음. 이에 분명한 탄소 순배출 제로라는 감축 목표 설정과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적응 인프라 강화가 중요함
- ‘뉴딜’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 공적자금 투입 이후 민간부문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이에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함
- 화석연료 기반 좌초 자산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메커니즘과 전환 기금의 설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재구성이 필요함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이나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부문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전 영역에서의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함. 현재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분리 방식이 아닌 디지털 그린뉴딜, 전환적 그린뉴딜, 정의적 그린뉴딜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그린뉴딜이 추진되어야 함
 - 에너지·교통·건물 등 도시공간에서의 인프라를 전환하는 디지털 그린 플랫폼(Digital Green Platform), 공유와 순환 경제·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성장 가치 체인(Local Growth Value Chain),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재분배·재생산을 포함하는 프로슈머 플랫폼(Prosumer Platform)이라는 3가지 전략이 상호간 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와의 녹색전환에 대한 거대한 새로운 딜(Big New Deal)이 전제되어야 함

■ 기술이나 산업 성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지구나 자연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며, 그 원인이 된 무한성장주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과의 공생과 협력, 분배라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은 동력원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비용의 제로화, 효율성 증대는 한계 비용¹⁷⁾ 제로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사회·경제구조를 분명하게 전환경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무한한 형태의 소비와 자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기술에 기반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넘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과 억제, 그리고 공정한 분배에 입각한 지구 생태계 내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가치에 대한 전환이 전제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음.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 공생을 위한 합리적 생산과 소비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그린뉴딜은 그런 점에서 탈성장 논의와 함께 갈 필요가 있음

16) Green(녹색)과 Whitewash(분칠)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을 내세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속이 행동을 가리킴. 정부 정책에서는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말하며, 넓게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치우친 정책 전반을 말하기도 함

17) 한계비용 : 고정비용이 흡수된 후 재화나 용역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는 문제에 대한 지식과 해결에서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의 원칙은 모든 부문에서의 불평등 해소, 그 결과로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는 현실 직시임. 즉, 기후위기를 나의 문제, 공동체, 넓게는 지역의 문제로, 그리고 현실적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전환을 위해서는 의식, 사회·경제구조, 재정투자의 전환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전환임. 기후위기는 현실적 인식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전환 시대에 맞는 그린뉴딜러(Green New Dealer)를 양성하고, 그린뉴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창출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그린뉴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음

- 그린뉴딜을 기존 사업에 대해 디지털을 결합한 녹색 포장의 접근이나, '런드리 리스트'(해야 할 일을 잔뜩 모아 놓은 목록)의 제시가 아닌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담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도 필요하지만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제되어야 함
 - 그린뉴딜의 대표적 주장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린뉴딜의 실행과 관련되어 '피어 어셈블리(Peer Assembly, 참여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는 동배 의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피어 어셈블리는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분산된 운영방식이고,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며, 운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방식이라고 말할. 또한, 전환과정의 각 단계에 즉각적으로 참여하고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역 시민 30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며, 이들 시민의 역할은 자신의 속한 공동체의 그린 뉴딜 사안 논의, 그린 뉴딜 로드맵의 작성과 지역사회 연계 통합, 그리고 실행 시도에도 긴밀하게 관여하는 것이 됨. 즉,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들과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들의 수평적 협의체가 바로 피어 어셈블리임¹⁸⁾
 - 수평적 협의체의 필요성은 '분권과 자치'라는 측면뿐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권한과 통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후위거나 코로나와 같은 위기 대응에서 그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확인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산불, 태풍, 전염병 등과 같은 기후재난이 올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전체 공동체 모두가 협력하는 더 수평적이고 분산된 새로운 거버넌스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칭)온라인 시민 아고라'를 만들어 그린뉴딜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의 촉진과 참여 보장이 필요함

- 되돌아 갈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급하며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일상화된 재난에서의 도시 및 공동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우리는 현재 겨울부터 봄은 미세먼지라는 사회재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폭염이라는 자연재난,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일상화된 감염병 재난이라는 3가지 재난에 직면하고 있음. 여기에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의 빈도수와 강도의 강화는 현실적인 적응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18) 제레미 리프킨, 『글로벌 그린뉴딜』, 민음사, 2020.1.31.

- 이러한 재난의 원인은 화석연료 기반의 무한성장주의이며, 이 결과로 벌어지는 기후위기의 문제임. 그래서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서 에너지전환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으며, 수요감소와 효율화를 지향하는 디지털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촉발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 전략이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인프라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적응역량을 지역에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과 정책적 우선 투자가 필요함
- 도시에서 기후변화는 온도 및 강수와 관련된 폭염, 폭우, 가뭄 등을 초래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이 도시의 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후도심지역의 건축물에서 에너지의 효율이 낮으므로, 탄소배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표 4 | 주요 기상재해의 특성 및 잠재적 영향

구분		폭염	폭우	가뭄
재해 규모	발생기간	중기~장기	단기~장기	장기
	크기	중~대	중~대	대
	잠재적 이재민 수	대	중	대
대표적인 피해지역		• 도시의 불량주택 밀집지역 • 고밀도 지역	• 하천변 저지대 및 산 • 인프라 구축 미비지역	• 수자원 관련시설 미비지역
도시의 잠재적 영향		• 냉방 에너지 수요 증가 • 대기의 질 악화 • 열섬현상으로 인한 기온상승 • 산불위험 증가 • 식품 생산량 감소 • 수질문제 발생(조류) • 노인 및 영유아, 빈곤층 피해	• 홍수의 위험 증가 • 산사태의 위험 증가 • 지반침하 및 토양침식 발생 • 기반시설의 피해 •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 • 수인성 감염질환 사망 증가 • 시골지역으로부터 이주 발생	• 수자원 부족/고갈 • 수력발전 가능성 감소 • 시골지역으로부터 이주 발생 • 높은 식량 가격

자료 : 김정곤 외, 「기후변화 적응 도시모델 및 적용기법 개발」, 토지구획연구원, 2014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함. 하지만, 현재의 그린뉴딜 논의와 추진은 여전히 기계적, 산업적,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포용력 확장으로 접근되어야 함
 -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화석연료 기반의 모든 구조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과학자들이 고안한 탄소시계(the carbon clock)에 따르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년에 불과하다고 함.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의 시간은 갈수록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그린뉴딜을 접근해야 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가 아닌, 또 다른 성장을 위한 해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하며 즉각적인 행동으로서 그린뉴딜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간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공생하기 위한 포용적 민주주의로서 확장되어야 함

1. 들어가며

1) 그린뉴딜을 아시나요

“그린뉴딜에 대해 아세요?” 작년 가을 시민사회 활동가와 길을 걷다가 문득 들은 말이었다. 필자는 그린뉴딜은 잘 모르지만, 말의 의미를 꼼꼼히 생각해보니, “이전 정부의 ‘녹색성장’이 생각나네요.”라고 답했고, 한참을 이명박 정부의 그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과 실천 운동에 집중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울분을 토했던 기억이 난다. 솔직히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후 꽃을 피울 시기에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약화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찬밥이 되었다(윤희철, 2019).

광주에서의 그린뉴딜 논의의 시작은 이 시기부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논의되던 그린뉴딜을 우리나라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던 몇 분의 전문가들을 모셔 세미나도 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린뉴딜을 알게 되었고, 관심이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필자와 같이 과거의 정책 때문에 그린뉴딜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계속되는 논의를 통해 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알게 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정책임이 인식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그동안 기후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교육, 청소년, 마을공동체 등에서도 우리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증폭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대응하고 참여하는 접근법을 찾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린뉴딜을 점차 받아들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그린뉴딜이란 말 자체가 외래어이고, 개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부족해, 확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린뉴딜을 언급하면서 이 정책은 급속한 진전을 겪게 된다.¹⁾

2) 변혁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현실

작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작성할 때, 우리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의 사회, 경제, 환경의 취약요인을 정리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6). 첫째, 지속적인 저출생 및 고령화 구조로 2017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가 50년 후 60% 수준까지 급감해 사회적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소득분배 악화로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높아지고 소득계층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이 2003년 6.5배에서 2018년 7.9배로 증가했다.

둘째,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2018년 기준 3%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대로, 2030년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고용률은 53.3%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2.1% 수준으로 낮다.

셋째,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기후변화, 폐기물, 동식물 멸종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폭염, 폭우 등의 피해가 증가하며,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 이전에 없던 환경문제가 생태계 파괴, 건강 위협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3) 이 글의 목적

우리가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기후위기라는 환경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한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희망한다면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난제이다. 그린뉴딜은 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

1) 이 정책을 우리나라에 알리고 확산에 기여했던 이유진 박사는 이렇게 크게 폭발적인 확산이 이뤄질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총선을 지나 2, 3년간의 긴 논의 후에 그린뉴딜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 마디가 우리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불러왔고, 사회적 논의보다 먼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어 과거 녹색성장의 실수를 다시 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넣고 있다.

구한다. 정책이나 계획을 단순하게 이행하는 것으로는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린뉴딜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처음 그린뉴딜이 등장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한층 더 나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린뉴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동향 속에서 광주가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주의하고 생각할 점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광주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포용적 관점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후위기에 대한 그린뉴딜의 등장과 변화

1) 기후위기의 심각성

“신은 항상 용서하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부분적인 재앙에 대해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다.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금 누가 말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연의 복수인지 알 수 없지만 자연의 반응인 것은 분명하다.

- 프란치스코 교황(2020.4.8.) - 영국 매체 the Tablet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스페인 격언을 사용하며 말했다. 작년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신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나 ‘기후위기(crisis)’, ‘기후붕괴(breakdown)’ 등으로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라는 중의적 표현 때문에 심각성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말들이 나올까. 국제기구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계속 말한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006~2015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0.87℃ 상승(IPCC, 2019)했으며, 최근 5년(2015~2019)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5년으로 기록하고 있다(IPCC, 2019; WMO, 2019; WMO, 2020).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상태가 지속하면 2100년에는 3.2℃ 상승을 전망한다(UNEP, 2019).

2019년 11월에는 전 세계 153개국 11,258명의 과학자들은 국제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BioScience)를 통해 현재 지구가 파멸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언했고,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20 지구 위험 보고서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기후위험 실패를 선정했다. 그리고 4월 UN 사무총장은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COVID-19 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 비상사태를 경고하며, 지구 보호를 위한 결정적 행동 촉구했다(유정민·김정아, 2020: 5).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지구가 회복하기 어려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²⁾와 있으며, 기후의 도미노 효과가 생태계, 사회, 경제시스템을 무너뜨려 지구상 많은 곳이 인간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는 모두 불평등 구조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사회적 재난이다. 지구온난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GDP 격차가 25% 벌어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Differnbaugh & Burke, 2019), 1994년 시카고 폭염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빈곤과 사회적 고립된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위기 확산 및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 협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자급자족 경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각국이 국내 문제 해결에 치중함에 따라 기후위기 해결에 필요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Foreign Policy, 2020).

2)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란 뜻으로 때로는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들에서 시작될 수 있고 대단히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 의해 각국은 올해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갱신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및 제출해야 하지만 중국, 미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충격을 입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연비 기준, 친환경 자동차 쿼터 등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완화하는 중이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약화되지만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회복력 투자도 줄어들 전망이며, 저탄소 투자는 긍정적 전망이 조금 우세하였고, 기후변화 국제 협력은 부정적, 긍정적 영향 비중은 비슷하다고 밝혔다(고재경 외, 2020: 5-19).

2) 그린뉴딜의 등장

우리 사회에서 '녹색'은 생태환경을 주로 의미한다. 영어의 그린(green)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³⁾ 녹색의 의미는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뉴딜(New Deal)에 대해 살펴본다. 뉴딜은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려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우리는 흔히 뉴딜을 단순히 경제 부양을 위한 국가 주도의 토목사업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뉴딜은 단순하지 않다. 1933년의 제1차 뉴딜은 경제의 전반적인 단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흔히 알고 있는 테네시강 유역의 다목적 댐 건설로 대변되는 대규모 국가적 토목사업이 그 시작이었다. 물론 이 토목 사업외에도 수반되는 다양한 정책이 등장했다. 은행개혁법, 긴급 안정, 일자리 안정, 농업, 산업 개혁, 연방 차원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금본위제와 금주법을 폐지했다.

제2차 뉴딜은 제1차 뉴딜에 대한 회의론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시작했다. 제2차 뉴딜(1935년~1936년)은 노동조합 지원책, 공공사업진흥국(WPA)의 안정 프로그램, 사회보장법, 소작인과 농업 분야의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농부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상당수의 진보적인 정책들은 이 시기에 다듬어진 것들이었다.

1930년대 루스벨트의 뉴딜은 전례 없는 1929년 경제 대공황에 대처하면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사회보장체제(건강보장을 제외한 실업, 산재, 연금 제도 등)를 떠받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미국의 노동체제(와그너법, 주 40시간 노동제, 최저 임금제)를 제도화했으며, 누진적 소득세(최고세율 90% 이상)를 구조화시키고, 비록 1999년에 폐지되었지만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지탱했던 글래스-스티걸법을 만들어냈다(김병권, 2019: 71-76). 이처럼 뉴딜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사회 체제를 바꾸는 대변혁이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린뉴딜은 단순하지 않다. 그린뉴딜은 녹색·환경 분야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신산업시장, 불평등 해소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린뉴딜의 '그린'은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파괴적인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극히 소수 부유층의 부와 이익의 생산을 위해 빈곤 및 노동자층 커뮤니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으므로써 경제를 완전히 현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린뉴딜의 '뉴딜'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시리즈를 실시하여 생산적이면서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수천만개 창출하고 이를 통해 역사상 가장 큰 경제생산 엔진과 경제번영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충수요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녹색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이정찬 외, 2020: 31-32).

3) 그린뉴딜의 변화와 현재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말은 누가 어떻게 시작했을까. 2007년 토머스 프리드먼은 '코드 그린'이란 책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뉴딜(New Deal)처럼, 21

3) 깊게 파고들면, 생태주의적 관점까지 논하고, 유토피아의 논의까지 연결된다.

4)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정책들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그렇다고 정책이 폐기되진 않았다. 대부분의 정책이 유사한 정책으로 교체됐다. 물론 제2차 세계 대전의 시작과 함께 뉴딜 정책은 마감됐다.

세기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 다음해 2008년 영국 그린뉴딜 그룹(Green New Deal Group)은 금융위기·기후변화·고유가의 삼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이 때 제시한 방안이 금융·세제·에너지 부문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이었다(이유진, 2019: 5).

한편, 유엔의 각 기구들도 그린뉴딜에 적극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엔 경제사회사무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는 기후, 에너지 및 개발을 위한 글로벌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추진 전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배치를 촉진하고, 에너지 빈곤 퇴치하며, 경제 회복 및 성장과 모든 국가에서 고용 창출,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UN DESA, 2009).

그 이전인 같은 해 3월, 유엔환경계획은 세계 그린뉴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 빈공을 해결할 경제 및 고용 대안을 제시했다. 이 시기가 세계금융위기가 심각했던 시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면서 동시에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린 결과였다. 이때 세계 그린뉴딜의 목적을 크게 세가지로 잡았는데, 첫째, 세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탄소 의존도와 생태계 파괴를 줄이고 경제를 깨끗하고 안정적인 개발로 인도한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 퇴치였다(UNEP, 2009: 5).

미국에서는 정치 운동이 되었는데, 2012년 녹색당의 질 스타인은 낡은 회색 경제를 지속가능 경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그린뉴딜 공약을 내세웠고, 최근 2020년 대선에서는 그린뉴딜이 주요 정당의 공약이 되어, 사회 변혁의 논의가 이뤄지고, 뉴욕과 LA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작년 ‘글로벌 그린뉴딜’을 발간해,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과 그린뉴딜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지구생태계를 지속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써 그린뉴딜을 강조했다.

【표 1】 세계 주요도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 및 실행계획안

구분	정책목표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80% 감축을 목표 • 건물, 에너지, 수송 및 폐기물 부문에 중점을 둔 계획을 수립 및 이행
로스앤젤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5년 탄소중립 장기계획 수립 • 13개분야(환경 정의, 재생에너지, 수자원, 건물, 주거·도시개발, 수송·대중교통, 제로배출 차량, 산업 배출·대기질 모니터링, 폐기물, 푸드 시스템, 도시 생태계 복원, 녹색 일자리, 공공부문 선도 등)의 전략 시행
포틀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80%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시개발, 교통, 건물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통한 화석연료 전환 전략 수립
스톡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년 순제로 배출 목표를 수립 • 2022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모든 화석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 수립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실현 • 대기질, 녹색 인프라,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적응, 소음, 순환경제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직접 배출량 100% 감축 • 간접 배출량 2004년 대비 80% 감축 목표 수립 • 교통·수송, 에너지, 폐기물 관리, 식량, 수자원 등 분야의 500개 실행계획을 포함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탄소배출 실제 제로를 목표로 6개 분야(에너지, 건축물, 수송, 자원·산업, 기후변화 적응, 참여·통합) 14개 정책을 마련

출처 : 유정민·김정아(2020).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p. 7.

최근 각 나라별 상황을 보면 그린뉴딜이 새로운 변혁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린뉴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2018년 10월 IPCC 1.5°C 보고서와 이 정책이 2018년 말부터 미국에서 받은 대중적인 지원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Klein, Naomi, 2019: 259-293). 기존의 국가 및 다자 정치 내에서의 활동 외에도 도시 외교 내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2019년 10월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은 글로벌 그린뉴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모든 94개 도시에서 중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C40, 2019).

캐나다는 2019년 5월 초, 기후위기의 파국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지구 환경 조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거의 70개 그룹의 비당파 연합이 그린뉴딜 협약을 시작했다.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 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곧이어 녹색당은 “미션, 가능, 녹색 기후 행동 계획”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Green Party of Canada, 2019).

유럽 대륙에서 유럽 스프링 연합(European Spring coalition)은 2019년 EU 선거를 위한 “그린뉴딜”의 기치 아래 캠페인을 벌였다. 2019년 12월, 새로 선출된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함하며 국경 조정 메커니즘인 ‘탄소 관세’ 옵션이 적용된다(Valatsas, Dimitris, 2020). 또한 올해 4월 유럽 의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복구 프로그램에 유럽 그린딜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EU는 더 많은 투자를 포함하는 “유럽을 위한 그린뉴딜”을 제정하고 석탄, 석유 및 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변경하는 것이 제안되었다(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2020).

영국에서 작년 3월 노동당 회원들은 그린뉴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노동당이 급진적인 그린뉴딜을 채택하여 영국 경제를 변화시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확산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녹색 일자리 보장, 공공 소유의 상당한 확장, 산업의 민주적 통제, 공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원한다(Taylor & Matthew, 2019).

이러한 배경 속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의미하는 ‘넷 제로’를 선언을 하고 있다. EU는 2019년 11월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를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한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을 유럽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수단을 가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C40는 파리협정과 연계해 2050년 탄소중립 비전(목표)과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했는데, 116개 도시가 참여를 선언했으며, 런던, 파리, 뉴욕 등 12개 도시가 탄소중립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2020년 5월 기준 세계 30개국의 1,496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 사태를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3. 포용적 관점의 그린뉴딜

1) 그린뉴딜의 딜레마

2016년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우리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기후 약당 국가’로 선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소극적, 계획 역시 국제사회의 기준에 걸맞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https://www.climatechangenews.com>, 2016).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8위였는데, OECA 국가 중 하위 5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세계에너지총회(WEC)의 에너지 트렐리마지수⁵⁾를 보면, 128개국 중 37위(OECD 하위 5위)였다. 한편, EU가 그린딜 계획에서 유럽을 ‘탄소중립 대륙’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발표해, 기후가 새로운 무역 규제 장벽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에너지트렐레마 지수는 세계에너지총회(WEC, World Energy Congress)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로 세계 각국이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때 세계지분분야를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향상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수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균형, 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면, 2018년 93.7%이다. 반면, 산업주조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 조선소,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7,470만 TOE⁶⁾에서 2018년 2억 3274만 TOE⁶⁾로 약 30년 사이 3.1배 증가했다. 최근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증가 중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도대비 1.2% 증가했다.

IEA의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2018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3.8%로 2010년 1.2%에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독일(35.3%), 영국(33.5%), 일본(17.8%), 미국(17.0%)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떨어져,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20% 목표를 달성해도 OECD 전체 평균보다 10년 이상 뒤처지는 상황이다.

IPCC는 '1.5°C 특별보고서'에서 각국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감축, 2050년까지 '0'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의제로 부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각종 정책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실가스 저감이 단순히 연료를 바꾸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통째로 바꾸지 않는다면 달성할 수 없다(이현석, 2020: 11-28).

따라서 그린뉴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당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면적인 사회 대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탈핵, 탈석탄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이 정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게다가 과거의 경험에서 알듯이 글로벌 경제 위기는 단순히 경제 침체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들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풍성효과'를 일으켜 급격한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졌었다. 1997년 IMF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면, 외부적 요인만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많은 파국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화석연료 분야의 노동조합에서는 이 정책의 취지에 인정하면서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UTERS, 2019.2.12). 또한 대량 해고와 사업 구조조정 등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그린뉴딜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에 관한 단순한 환경정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노동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포용적 관점의 그린뉴딜 정책

그렇다면, 포용적 관점에서 그린뉴딜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하는가. 사실 누구나 인지하듯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이다. 포용성이 기반하지 않는 경제정책은 기후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정책이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에서는 더욱 두드러질 문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No one leaves behind!)”는 전제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도시 차원에서 기후정책에서 포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후변화 해결에 전담하는 세계 거대 도시의 네트워킹인 C40는 포용적인 기후행동을 말한다. 크게 포괄성, 공정성, 최전선 그룹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첫째 포괄성은 공정한 결과와 정책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티, 특히 소외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룹을 정책 결정 및 도시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성은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또는 지리적으로 정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들 그룹 간의 영향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셋째, 최전선 그룹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개인, 집단, 공동체 등)으로 정의하여 가장 먼저 최악의 영향을 경험한다. 여기에는 생계를 위해 천연자원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 원주민 커뮤니티,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성별, 소득 수준, 장애, 연령, 근무 조건, 비공식 상태 또는 종교에 따라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6) TOE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석유환산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에너지를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영어로는 TOE(Tonnage of Oil Equivalent)이며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1석유환산톤이라고 정의한다. 즉, 1000toe/년 이라고 한다면 1년동안 1,000톤의 석유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포함된다. 그들은 종종 경제적, 정치적 자본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대처할 자원이 적다.

이러한 정책 속에 C40은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는데, 계획, 정책 및 투자를 생성하는 부문, 도시, 지역 또는 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 보호를 받도록 한다. 정의로운 전환에는 일자리 및 생계 손실의 영향을 줄이는 조치와 근로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산업의 단계적 폐지, 새롭고 낮은 배출량과 양질의 일자리 및 생계를 창출하는 조치와 건강한 지역사회가 포함된다(C40, 2020).

포용적 관점에서 그린뉴딜이 실행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능동적인 전환과정에서 사회 안 전망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동차, 전력, 탄소집약적 산업 등은 그린뉴딜로 인한 대규모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중소 부품기업, 지역공동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전환과정의 이익과 손해가 공정하게 부담되도록 개입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김병권, 2020: 39).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EU는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과정에서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을 기획해 약 1천억 유로(140조)를 조성하기로 했다(European Commission, 2020.1.14). 전환과정에서 취약하게 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과 기술교육, 에너지 빈곤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하고, 탄소 집약형 산업이나 지역이 저탄소 기술 기반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이나 창업, 연구개발 지원을 공표했다.

둘째, 그린뉴딜이 목표로 하는 녹색 사회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녹색사회 전환에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필연적 발생한다.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후쿠시마 사고 직후 탈핵 문제를 논의했던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나 탈석탄 방안을 논의했던 '석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과학자, 사회학자, 종교계 인사, 노동조합, 재계 대표 등 다양한 이들 참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을 권고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의 문제점과 에너지 전환이 늦을 때 생길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을 견인해야 한다(이현석, 2020: 25).

셋째,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이를 위한 평생학습과 학교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고 있다. 최근 여름의 폭우와 폭염이 기후변화가 야기한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경제와 생활을 생각하면, 대규모 토목개발이나 중화학 공업·화석연료 산업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까. 아직까지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교육과 학습을 통해 인식하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배우는 학습과 교육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생태교통, 그린 리모델링, 물순환, 생물다양성 등과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평생학습과 학교 교육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가장 적은 비용이 투입되는 영역이지만, 인간의 행태변화는 직접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기 때문에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4. 기후위기 시대 광주의 기후정책과 그린뉴딜

1) 광주 그린뉴딜의 당위성

지난 20여 년간 기후위기대응의 선도도시로 광주는 수많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으나,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8,091천tCO₂eq⁷⁾에서 2015년 9,840천tCO₂eq.로 10년 사이 약 21.6% 증가했다. 배출원인별로는 수송(41%)>산업(26%)>가정(24%)>공공(4%)>폐기물(4%)>농축산(1%) 순으로 건물·수송분야가 약 95%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물·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생활공간 녹색전환이 요구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동안 광주시도 나름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했다.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 시행(2008), 기후대응위기 전담과 신설(2008),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개최(2011), 탄소중립도시 광주

7)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비교할 때에는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기타 온실가스에 대해 이산화탄소의 효과로 산정하여 이산화탄소 톤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이것을 tCO₂-eq로 표시한다.

2050 계획(2012) 발표, 광주기후행동계획(2017), 광주온실가스감축로드맵(2018)의 수립, 최근의 2045 에너지 자립 도시 선언(2020)까지 여러번 선언과 발표를 했다.

사실 국내의 그린뉴딜의 정책은 모두 그동안 광주가 충실히 준비한 정책과 사업이다. 계획 및 정책의 수립, 기후위기를 위한 거버넌스, 광주형 기후위기대응 연구 등은 꾸준히 이뤄졌으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재원의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한 측면이 컸다. 하지만 최근 시민 스스로의 기후행동과 노력,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광주가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의 모델도시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 최근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이 그 성과이고,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제로 광주를 향한 시민의 염원을 반영한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의 발표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의 광주를 향한 전환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광주가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방향

■ 햇빛과 바람의 소유권 : 혁신적인 공공투자와 시민편당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일상 속에 공기처럼 누리던 것이 에너지원이 되면서 들게 된 질문이다. 화석연료처럼 소수 대기업과 자본가가 소유권을 갖고 영리추구를 하는 것과 달리,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여기에서 나온 수익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생태환경이 주는 공기, 물, 태양 등의 자산은 모두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유재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그린뉴딜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면 우리 사회가 갖는 불평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기반 경제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와 소득을 이제는 불평등하게 분배하면 안된다. 그린뉴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의 방식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독일이 에너지전환의 선진국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도 태양광 발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전략적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장려했다. 이를 위해 2006년 협동조합법(Genossenschaftsgesetz) 개정을 통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조합원 수가 7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는 등,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동시에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환경적 목적을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서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될 수 있었다(심성희, 2018: 16).

일설에 의하면, 당시 낮은 은행 이자율보다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보장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도되었다. 일종의 ‘그린 연금’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처럼 그린뉴딜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이익을 시민들이 공유되고, 여기에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투자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얻은 수익을 복지예산으로 쓴다면, 태양으로 복지를 하는 새로운 세상일 열릴 수 있다.

■ 사회 변혁을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의 장

그린뉴딜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바람, 수열 등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발성할 수 없다. 정책 자체는 그렇게 가동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난제는 해결될 수 없다.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관련된 장기 플랜 ‘OneNYC 2050’ 수립 및 그린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활성화법)’를 통과시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한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뉴욕시의 사례는 눈여겨볼만하다. 뉴욕시가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일이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뉴욕시민들이 시와 지역사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응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루트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웹, 설문지, 대면조사를 통해서 1만 4천 명 이상의 뉴욕시민이 OneNYC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LinkNYC 캠페인을 통해 약 360만 건의 디지털상 의견 빅데이터를 수집했다. 뉴욕시민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가 지역협력 기반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8개의

목표를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현재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4세의 아이들이 30대 중반(2050년)이 되어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릴 때 물려주고 싶은 뉴욕시의 8가지 모습을 비전과 목표로 설정했다(이정찬, 2019: 19-23).⁸⁾

뉴욕의 OneNYC 비전은 환경과 경제만 고려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단순한 ‘그린뉴딜’ 계획만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 전체의 변혁을 함께 고민하고 고려하는 목표와 지향점을 담고 있다. 특히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도출하고, 달성 목표를 산정한 것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뉴욕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해법에 대한 논의 과정이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보통 우리는 뉴욕의 그린뉴딜 계획에 대해 중요한 목표치만을 고려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 목표를 도출한 과정을 보면, 뉴욕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도 그린뉴딜을 구체화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공한다.

광주시 그린뉴딜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의 목표는 제시될 수 있지만, 실제 실행을 위한 방안은 시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 합의와 참여의 장이 필요하다. 이미 광주시는 시민참여의 장치를 다수 갖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마을 단위로 움직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고, 매년 개최하는 시민총회가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협치조례가 제정되어 협치협의회 구성까지 준비 중이다. 사회적 대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해 포용성을 기반으로 그린뉴딜을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표 2 | 미국 뉴욕시의 OneNYC 지표와 목표

지표	최근 데이터	목표
지방선거 투표율	21.5%(2017)	증가
총 일자리	4.5백만(2018)	증가
탈빈곤율(2014년 이후)	236,500(2017)	8십만 명 (2050까지)
저소득 임대가구 비율	49.9%(2017)	감소
인종별 소득격차(백인가구의 중간가구 소득을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또는 기타 인종 가구의 가구중간소득으로 나눈 값)	2.0X(2017)	감소
조기 사망률	189.4 1십만명 당(2016)	2040년까지 25% 감소
대기질(3년 평균 PM 2.5 측정)	7.85 $\mu\text{G}/\text{M}^3$ (2017)	감소
고등학교 졸업자 수	76%(2018)	2025년까지 84%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상쇄(2005년 수준과 비교)	17%(2017)	205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이동수단(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의 교통수송분담율	68%(2017)	2050년까지 80%

출처 : The City of New York(2019). OneNYC 2050. 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p. 50.

■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그린뉴딜은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이다. 그린뉴딜은 기존의 일부 대기업주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편향, 수출 중심의 과거 경제에서, 공공투자 주도, 지역분산 산업 기반, 녹색혁신으로 내수확장 미래 경제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홍중호 교수가 발표한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발전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최대 28만개

8) 뉴욕시가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가 활기차고, 경제가 누구에게나 포용적이며, 모든 지역사회가 번성하고, 모두의 삶이 건강하며, 누구나 우수한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고, 기후가 살기 좋으며, 도시 내 이동이 효율적이고, 인프라가 현대적인 뉴욕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중앙일보, 2017.8.23).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외국 사례에서 10억(100만 달러)당 16.3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된다. 추가적인 생태경제, 청정경제는 자원 집약성 서비스가 아니라 반대로 노동집약적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화는 전환과정을 뒷받침할 사회 안전망뿐만 아니라, 그린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병행되어 추진될 수 있다. 게다가 그린뉴딜 전략 이행 과정에서 창출될 수 있는 녹색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내수지향성을 더 크게 갖는 특징이 있다.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공공투자 방안에서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량으로 확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종료 이후 일자리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의 마련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임금과 노동조건 등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신규 산업의 특성상 일자리를 괜찮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그린뉴딜의 특성상 대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린뉴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구분하여 사업의 상당수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김병권, 2020: 11-28).

■ 정의로운 전환·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순위 원칙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 기후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지금도 한 여름 폭염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지출을 보면, 저소득층은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만원도 내지 못한다(국제기후환경센터, 2020: 82-94).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현실은 경제적 불평등이 희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당장 상당수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 중심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로 발생하는 실업을 각 직종별 맞춤형 재교육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마련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의 재구축이 요구된다.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을 광주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폭우로 인해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확대, 농업과 도시기반시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피해는 빈곤층,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등에 피해가 집중된다. 그린뉴딜 정책은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공공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종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의 지향

우리가 봉착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광주가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가 되더라도, 약 60%의 탄소배출은 사라지지 않는다. 광주의 도시구조상 탄소배출은 교통과 건물에서 나온다. 한 기관이나 한 영역을 최선을 다해도 다른 영역이 잠잠하다면 절대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에 관한 다양한 계획도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산업국을 중심으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발표를 했다. 환경생태국을 중심으로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 시도와 노력에는 당연히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하나의 부서나 영역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공지능산업국이 발표한 에너지전환 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세한 수치와 계획은 있지만, 광주시가 사업으로 풀 수 있는 방법론만 제시되어 있다. 환경생태국이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도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계획이지만, 과연 다른 부서나 기관, 각 분야와의 협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린뉴딜 계획은 에너지, 교통, 건물 분야의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 그룹부터, 모든 의견이 수렴되고, 참여의 방법,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 등을 모두 진단해 나가면서 논의를 통해 일을 풀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광주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 기구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새로운 장치나 제도를 옥상옥처럼 다시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방식을 조정하고 정리해 광주형 그린뉴딜을 이행할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5. 마치며

과거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추상적인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 에너지, 건축 등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경제적 성장과 연동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과거와 다를 바 없지만, 과거에는 단순한 계획에 그쳤다면, 탈탄소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것이다. 물리적인 부분이나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그린뉴딜이 멈춰서는 안 된다. 당장의 경기 침체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때 이후 우리 사회가 갖는 사회적 양극화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그린뉴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짐을 주는 개발행위나 지속불가능한 발전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의 기술발전으로 지금의 문제를 우리 미래세대가 해결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그쳐야 한다. 지금까지 모두가 암묵적인 합의로 미래의 '누군가'가 '어떤 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작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었던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에 대해 수많은 학습을 통해 2040년 달성 목표에서 시민들이 고작(?) 50%의 에너지자립도시를 내세웠던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에너지를 평평 쓰는 행위는 이제 그쳐야 하고, 이를 위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집에 두 대나 세 대씩 쓰는 냉장고도 한 대로 줄여야 하고, 모든 전기 제품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에서 1등급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목표다.

광주시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시민의 합의와 참여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목표만 선포하는 행위를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해 왔다. 정치적 문구로 '그린뉴딜'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아동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2050년, 광주가 탄소중립도시가 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광주를 꿈꾼다면, 그 토대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만들어져야 한다.

목표는 거대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이행은 우리 시민이 해야 한다. 그 이행된 목표가 달성되거나 실패하거나 2050년 우리의 미래세대는 광주에 살 것이다. 그 세상이 기후위기를 멋있게 극복한 유토피아가 될지, 실패에 그친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현재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 참고문헌 |

- 고재경 외. 2020.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경기연구원.
- 국제기후환경센터. 2020. 『2020년 광주광역시 폭염 시민인식조사 보고서』. pp. 82-94.
- 김동구·손인성. 2018.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 김병권. 2019. 전례 없는 기후-경제위기 대처와 공공의 역할.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제1차 토론회 자료집』.
- 김병권. 2020. 그린뉴딜과 산업전환 전망. 『정의당 그린뉴딜 경제 전략 발표 및 토론회』.
- 대한민국 정부. 201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대한민국 정부.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서울시 기후행동포럼. 2020.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정책 제안』.
- 심성희. 2018.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시사점 연구: 독일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방정부의 기여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 유정민·김정아. 2020.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서울연구원.
- 유종일.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 자료집』.
- 윤제용. 2020.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 KEI환경포럼.
- 윤희철. 2019.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더함 포커스』 제2권 제1호.
- 이유진. 2019. 『그린뉴딜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국토연구원.
- 이정찬. 2020.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 이정찬 외. 2020.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현석. 2019. 기후위기 대응-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 방안.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1차 토론회 자료집』.
- 이현석. 2020. 그린뉴딜과 탄소 순배출 제로-에너지전환 쟁점과 과제. 『정의당 그린뉴딜 경제 전략 발표 및 토론회』.
- 조영철. 2019. 거시경제 변화와 녹색뉴딜 재정정책의 필요성.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1차 토론회 자료집』.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 투자·노력 따라 한국서 2050년 '재생에너지100%'도 가능. 『중앙일보』. 2017.8. 23.
- 홍종호. 2020.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 자료집』.
- C40. 2019. Mayors Announce Support For Global Green New Deal, Recognize Global Climate Emergency. Climate Home News. South Korea leads list of 2016 climate villains. 2016. 4. 11.
- Differnbaugh. Noah & Burke. Marshall. 2019. "Global warming has increased global economic inequality". PNAS. 116. 20.
- European Commission. Financing the green transition: The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and Just Transition Mechanism. 2020.1.14.
-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2020. EU plans multi-billion euro green recovery but falls short in crucial areas.
- Foreign Policy. How the world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2020. 3. 20
- Green Party of Canada. 2019. Mission: Possible: The Green Climate Action Plan.
- IPCC. 2019. Global Warming of 1.5°C.
- Klein. Naomi. 2019. On Fire: The (Burning) Case for a Green New Deal. NY: Simon & Schuster.
- Taylor. Matthew. "Labour members launch Green New Deal inspired by US activists". The Guardian. 2020. 5. 15.

The City of New York. 2019. OneNYC 2050, 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REUTERS. "Labor unions fear Democrats Green New Deal poses job threat". 2019. 2.12.

UN DESA. 2009. A Global Green New Deal for Climate. Energy. and Development.

UNEP. 2009.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UNEP. 2019. Emissions Gap Report 2019.

Valatsas. Dimitris. "Green Deal, Greener World". Foreign Policy. 2020.

WMO. 2019. The Global Climate in 2015-2019.

WMO. 2020. WMO Statement of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19.

03

페미니즘 출산 정치의 모색을 위하여 : 출산과 모성의 몸에 관한 페미니즘 논의와 출산 정치

김경례(Kim, Kyung-rye)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사회학 박사)

kgr2037@naver.com

출산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거나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사건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 기술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엄청난 노고를 필요로 하는 재/생산 노동이며, 동시에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은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주요한 참여 주체이다. 따라서 임신의 준비 단계부터 출산과정, 출산 이후의 보육 및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별도의 출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키워드 : 출산노동, 출산의 의료화, 출산기술, 재생산건강권, 출산정치

이 글은 김경례, 2014. 『난임여성의 체험과 출산기술의 정치』, 전남대 출판부, 제2장 제1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1. 들어가며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인구 및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에 관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으나 저출산 지원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저출산 현상을 두고 그것이 위기라고 주장하는 담론들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인구 절벽'을 운운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 들고 부양 인구는 늘어나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저출산 위기에 관한 지배적인 담론들에서 정작 여성과 개별커플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꺼리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저출산 지원정책이 본격화 되고 만혼과 보육 및 교육의 사회적 여건 미흡, 여성 및 청년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 및 직장문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더 이상 출산의 문제를 여성이나 개별 커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저출산 지원정책을 청년정책, 노동정책, 워라밸 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성평등 정책 등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산 및 양육휴가 등으로 대변되는 근로자의 모부성권 강화와 육아기 탄력근무제 등으로 대변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집중되고 있다. 보육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은 저출산 지원정책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정책이나 여전히 여성의 출산과정에서의 경험, 출산의 노고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및 단기 노동자, 장애여성, 비혼여성, 난임여성,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출산과정과 경험은 더욱 비가시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출산 지원 정책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이 글은 현대 여성의 출산권, 재생산건강권, 출산방법의 선택과 출산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변화로 출산의 의료화(기술과학화)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페미니즘 출산 정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거나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사건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 기술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엄청난 노고를 필요로 하는 재/생산 노동이며, 동시에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은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주요한 참여 주체이다. 따라서 임신의 준비 단계부터 출산과정, 출산 이후의 보육 및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별도의 출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하에서는 그간 출산과 여성의 몸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와 한계, 시사점을 정리하고 필자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2. 성(sex)/젠더(gender), 공/사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

출산과 모성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화는 몸과 섹슈얼리티 문제에 주목했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이들에게 출산과 모성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서 여성억압의 원인이거나 여성해방의 원천으로 다루어졌다(Tong, 1995: 110-138). 파이어스톤(Firestone)에게서 여성의 몸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따라서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몸을 통한 출산과 모성의 역할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restone, 1970). 이에 반해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파이어스톤의 생물학적 환원론을 비판하면서 여성억압의 원인을 생물학적 특성에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남성의 통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O'Brien, 1983; Rich, 1976). 남성들의 출산과정에서의 소외와 여성의 출산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의 생물학적 몸과 출산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거해야 할 것은 가부장적 남성 권력이며 여성의 생물학적 몸을 통한 출산과 모성의 역할은 유지해야 할 여성 해방의 원천이라고 본다.

출산과 모성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모성성과 신생식기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출산보조기술)에 대한 논의에도 반영된다. 즉 모성성은 가부장체제에 의해 외적으로 강요된 이데올로기이거나 여성권력을 담보할 수 있게 해주는 해방적 잠재력으로 각각 의미화 된다.¹⁾ 또한 신생식기술은 생물학적 본능으로서의 모성성과 생식 중

1) 오브라이언(O'Brien)과 리치(Rich)가 생물학적 모성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해서 모성성을 생득적인 여성의 본능으로 생각했거나 전형적인 모성성이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브라이언은 강요된 모성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도 억

심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생물학적 혁명의 수단이거나 여성의 출산과정의 통제권을 기술과 학을 매개로 남성들이 빼앗아감으로써 가부장체제를 지속시키고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각각 의미화 된다. 이는 신생식기술에 대한 낙관론과 비판론으로 전개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비판은 2절에 소개하였다.

출산과 모성성, 신생식기술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내부의 이러한 논쟁은 서로 대립되는 지점이 있으나 두 가지 점에서 공통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임신-출산을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사건으로 본다. 둘째, 임신-출산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성별분업을 정당화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주요 기제이며, 이러한 억압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가부장적 남성 권력이다. 따라서 가부장적 지배와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파이어스톤이 생물학적 몸을 통한 출산을 거부하고 신생식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이용을 주장했다면, 오브라이언과 리치 등의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을 둘러싼 제도나 문화를 바꾸고 출산 과정의 통제권을 여성들이 유지·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전형화된 모성의 역할과 모성성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본능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혔고, 생식 중심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비판하였으며, 출산이 여성이나 개별 가족의 사적인 문제라는 통념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출산이나 양육의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모성을 의무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로 자리매김했고 1970년대 서구사회의 재생산권리 운동을 촉발시켰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²⁾,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를 기치로 내 걸로 성(sex)/젠더와 공/사의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출산과 모성을 젠더의 문제, 공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모성보호 및 양육에 관한 법·제도를 만들고 출산조절(birth control)³⁾의 권리를 제기하는 등 정치적 의의를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초역사적이고 초계급적인 문제설정과 근대적 인식체계의 이분법적 문제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여성의 몸과 모성성을 억압의 토대로 제시하던 여성권력의 토대로 제시하던 출산은 생물학적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로 간주한다. 그럼으로써 모성적 몸을 힘의 원천인 자연이거나 가부장적 문화에 종속된 실체로 위치지우는 자연/문화의 이분법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임신-출산을 모든 여성의 공통의 문제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거나 거부하는 여성 주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한다. 그럼으로써 여성 주체들의 다차원성과 복수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즉, 몸과 젠더를 고정된 존재적 실체나 개념으로, 여성들을 동질화된 집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을 자연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면 출산 과정에서의 여성의 노고가 비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출산을 수행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여성은 배제될 것이고, 출산을 문화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면 의도치 않게 출산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가부장적 문화에 종속된 존재로만 위치 지우게 된다.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출산환경 속에서의 모성적 몸들의 ‘물질성’의 변화와 차이들, 그리고 생성 과정이 삭제된다. 몸들의 ‘물질성’이란 육체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그로츠나 해러웨이가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생물학적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몸 자체가 이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며 우리가 몸에 대해 알고 있는 이해방식이나 규범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화의 효과라는 것이다. 이는 푸코가 이야기한 권력의 효과로서 권력이 각인된 몸이라는 발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로츠나 해러웨이는 푸코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물질적·기호적 몸들이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몸을 권력이 각인되는 공간 만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구성적인 공간으로서 위치지운다. 따라서 ‘몸의 물질성’은 생물학적 몸을 포함해 몸들이 의

1) 압의 원인을 저항의 원천으로 정치화하려고 하였고, 리치는 여성이 자녀와 맺는 ‘관계로서의 모성’과 남성의 통제 하에 있는 ‘체제로서의 모성’을 구분하면서 후자의 모성성을 비판하기 위해 전자의 모성성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로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보바르도 여성의 생물학적 몸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출산은 실존주의적 맥락에서 즉각적 존재를 넘어서 대자적 존재가 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였다.

3) “출산조절이란,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실천을 통칭하는 말로, 미국의 여성운동가 마거릿 생어(M. Sanger)가 여성들에게 안전한 피임을 보급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기 운동을 위한 이름으로 1914년 만들어진 용어이다”(배은경, 2005: 264). 여성을 출산의 주제로 위치 짓는 이러한 발상은 1970년대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재생산권리운동으로 이어진다.

미화 되고 구성되는 관계와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몸과 젠더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결정론적인 문제설정을 비판하고 몸과 젠더를 관계 및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여성 주체들의 복수성을 드러내고자 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은 성차, 젠더, 몸을 문제시하며, 이성 중심의 근대적 주체설정을 비판하면서 몸을 복권하고 주체들의 힘과 생성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 탈근대적 논의들과 맥을 같이 한다.⁴⁾

먼저 이리가라이는 보편적 여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여성 몸들의 복수성에 주목하면서 성차를 남성과의 차이 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들로 확장시킨다(Irigaray, 2000).⁵⁾ 브라이도티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에 대한 문제 의식과 들뢰즈·가타리의 욕망의 정치학을 수용하여 “욕망하는 주체들을 분자적이고 유목적이고 복수적인 것으로 구성”하면서 “복수적인 여성의 체현된 목소리들을 위한 이동하는 입장들을 제공하는 유목적인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성차를 주장한다(Braidotti, 2004: 268-269).⁶⁾ 이들에게 몸들은 근대 서구 지성사의 동일자의 철학을 비판하고 다층적으로 성차화된 복수적인 여성 주체들을 드러내는 전략적인 지점이다.

육체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그로츠(Grosz)는 몸이 “안과 바깥,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자아와 타자, 마음/몸의 이항대립이 연상시키는 이분법적 쌍들 사이의 대립을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Grosz, 2001: 82).⁷⁾ 그래서 몸은 이분법적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쌍의 중층적인 지점에서 비결정적으로, 그리고 위태롭게 배회하는 문지방이자 경계선 개념”이 된다. 마찬가지로 몸을 생물학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이며 “몸은 사회적·정치적·문화적·지리학적 각인의 공간이자 생산과 구성의 공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rosz, 2001: 86-87). 따라서 몸은 자연이나 문화로 환원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젠더 또한 고정된 존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와 맥락으로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젠더는 언제나 관계이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존재들의 범주이거나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Haraway, 2002: 28).” 또한 “젠더는 변화하거나 맥락화된 현상으로서,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수한 일련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 수렴의 지점이다”(Butler, 2008: 103). 즉, 전형화된 모성적 규범과 역할은 본질적으로 여성적이거나 가부장적이라기 보다는 버틀러의 용어를 빌자면 반복적 수행성(performativity)을 통해 획득된 결과이다. 따라서 출산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행위주체성(agency)⁸⁾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출산을 수행하는 행위를 통해 주체성의 구성과정을 탐색하고 형상화하는 것이다.

몸과 젠더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따라가 보면 몸과 젠더는 경계적 개념(Balsamo, 1996)이며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관계와 과정들이다. 따라서 단일하지 않은 복수적 여성주체들의 차이와 행위주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모성적 몸이 자연이나 문화로 환원될 수 없듯이 모성성이나 모성적 욕망 또한 외적인 강요(이데올로기)나 자유주의적 선택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의료화가 거의 완성되었고 기술과학의 개입 없는 임신·출산의 수행을 상상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기술과학의 가부장적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부 에코페미니스트들처럼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여 기술과학을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4)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몸, 젠더, 성차를 둘러싼 근대적인 이분법적 인식체계를 비판하고 그것들을 관계 및 과정으로서 설명하기 위해 몸의 복권과 주체성 생산에 관한 스피노자, 니체, 푸코, 들뢰즈, 가타리 등의 탈근대적 남성 학자들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전유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비판과 전유의 정도와 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남성학자들이 이성 중심의 근대적 주체 설정을 비판하기 위해 몸과 욕망의 문제, 자본주의 체제에 주목하는 것만큼 젠더나 가부장체제의 문제에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태혜숙은 젠더나 가부장체제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거나 논의하더라도 부차화하는 남성학자들의 이론적 경향을 “각주의 정치학”이라고 비판한다(태혜숙, 2007: 35). 태혜숙이 지적한 것은 일면 사실이나 현실적인 정치적 실천을 위해 의미가 있는 이론들을 전유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남성학자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전유할 필요가 있다.

5) 이리가라이가 여성 주체의 복수성을 몸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질주의적 설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리가라이는 몸을 이분법적이거나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론적 혐의를 지우기 보다는 몸을 긍정적인 힘으로 복권시키기 위한 인식론적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6) 브라이도티는 들뢰즈·가타리의 욕망의 정치학, 유목민적·리좀적 사유를 수용하지만 그들이 성차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7) 그로츠는 라캉이 주체를 묘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한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는 뒤통수의 띠 개념을 수용하지만 라캉처럼 몸과 욕망을 결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구성의 장으로 본다.

8) 일반적으로 ‘agency’는 행위성, 또는 행위주체성으로 번역된다. ‘agency’는 주체가 사회구조나 지배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측면보다는 주체들이 “스스로를 정의하고 사결권을 행사하려는 개인적 의지나 사회적 집단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다(Collins, 2009: 481).

오히려 권력이 출산과 여성의 몸을 자연화 하는 과정이 분석되어야 하며 자연화된 몸을 넘어서 “자연을 재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Haraway, 2002). 기술화된 출산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몸들은 기계나 유기체로 환원할 수 없는,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인 사이보그 주체이며, 자연도 문화도 아닌 몸들의 물질성의 변화(Haraway, 2003: 8-9)에 주목함으로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모성의 정치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을 자연화 하지 않고 모성성을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로 환원하지 않으며 모성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피해자화하지 않으면서도 젠더권력관계의 배치를 바꾸고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는, 모성적 몸의 물질성의 변화와 모성적 욕망의 생성 과정에 주목하면서 출산을 수행하는 몸들의 위치와 가치에 대한 재형상화가 필요하다.

또한 몸의 물질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하고 몸을 상황과 맥락 속에 위치지우고자 할 때 출산과 모성성을 가부장체제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다. 가부장체제 만큼 자본주의 체제도 몸의 물질성의 변화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출산과 여성의 몸은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자원으로, 소비 영역으로 자본화되고 있다. 불임클리닉을 비롯한 의료산업 및 제약산업의 성장, 정자 및 난자 은행, 제대혈 은행 등의 각종 몸 보관 산업, 생식세포의 거래, 대리모를 통한 자궁의 거래 등은 출산시장의 형성과 몸의 상품화 및 자본화를 잘 보여준다. 이제 출산 및 입양을 포함해 아기를 얻는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베이비 비즈니스’라 불릴 만하다(Spar, 2007).⁹⁾

또한 생명체의 발생 기작과 원리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의과학적 지식이 중요한 생산력이 되면서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여성의 몸들은 출산과 상관없이도 과학적 연구의 자원이거나 기술적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신자유주의적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출산과 여성의 몸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문제화해야 하며 젠더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지역 등의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몸들이 기술과학의 연구 및 산업적 자원으로 활용될 때 위계적으로 더 낮은 계급, 인종,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과 자본은 한편으로는 출산과 몸을 자연화하면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일과 존재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들을 통해 개발된 의과학자들의 지식과 정보를 자본화하고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생산적인 노동으로 규정·보증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 다시 말하면 몸을 ‘자연화’, 자연적 속성으로 간주하면서 의과학적 연구에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정당화하며 임신·출산을 생산적인 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것과 관련한 소비시장을 확장시킨다.

마찬가지로 신생식기술의 구성과 적용 과정에서 몸들의 노동참여를 비가시화하고 의과학자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을 과학으로, 몸 체험성에 근거한 여성의 지식을 비과학으로 위계화한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을 신생식기술의 대상이거나 수혜자, 소비자로서만 위치 지운다. 따라서 기술과학과 권력 및 자본이 절합된 현재의 상황에서 몸들의 생산성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노동의 재개념화를 통한 가치투쟁이 필요하다. “과학적 몸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급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종류의 특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몸은 다른 종류의 참여와 개입을 요구(Haraway, 2002: 376)”하기 때문이다.

9) 이런 점에서 현재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출산 및 양육비를 고려할 때 부의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부가 많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일이 되었으며 가난한 난임여성들의 경우, 불임시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적 접근권이 (재)생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다.

3. (재)생산 노동과정으로서의 출산

성/젠더, 공/사, 자연/문화의 이분법과 마찬가지로 생산/재생산의 이분법과 노동/비노동의 이분법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재생산' 개념과 '노동' 개념은 둘 다 논쟁적인 개념이다. 이는 재생산 영역의 범주설정과 재생산 개념의 다의성, 재생산과 생산 사이의 관계 설정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출산을 재생산 개념으로, 특히 인간 재생산의 범주로 설정한 것은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역사의 결정적 계기로서 생산과 재생산을 두 축으로 제시하였다.¹⁰⁾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생산보다는 생산의 영역에 주목했으며, 이러한 재생산에 대한 생산의 우위성 테제에 대한 비판은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 확장하고자 했던 맑스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 모두에 의해 수행되었다.

오브라이언(O'Brian)은 생산노동에 대한 맑스의 이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여성의 일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생산과 대비되는 재생산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노동과 노동과정이 어떠한 구조로 여성역임을 형성하는가를 밝혔다(O'Brian, 1983). 오브라이언이 임신과 출산을 재생산 노동으로 개념화한 것은 여성의 역임을 자본과의 관계성 안에서가 아니라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독립적인 성별역압체계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이상화, 1988: 3).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 맑스주의 패러다임이 가부장체제와 젠더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일인 임신·출산, 가사, 양육 등을 생산에 대비되는 재생산노동으로 의제화하면서 노동력 재생산노동이나 인간 또는 생물학적 재생산의 문제에 천착하였다.¹¹⁾

이에 반해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재구성하고자 했던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조건과 생산관계의 사회적 재생산 문제에 주목하였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대변되는 비판이론가들이나 맑스주의의 세례를 받은 문화이론가들이 주목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이토록 강고하게 유지, 재생산되는가 하는 것이었고 이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현실적인 정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알튀세르 역시 가족과 학교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통해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생산조건이 재생산됨으로써 자본주의 구조를 공고화 한다고 본다(Althusser, 2007). 알튀세르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주체를 사라지게 했다면, 현대의 대표적인 프랑크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구조와 행위 간의 간극을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으로 좁혀보려 했지만 재생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교육체제를 통한 계급재생산의 문제를 분석한다(Bourdieu, 2000).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와 계급 재생산 문제에만 주목했듯이 오브라이언도 임신·출산을 사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일로, 그리고 가부장체제와 연결된 억압적인 젠더 재생산 문제에만 바라보았다. 즉, 생산과 재생산의 이분법을 그대로 둔 채 생산과 재생산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산과 재생산,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이원론적 사고체계이다(Jagger, 1999). 이런 점에서 생산/재생산의 이분법은 남성/여성의 이분법과 연관되어 재생산을 그저 생산에 봉사하기 위해 있는 사후 영역으로 치부하기 위한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태혜숙, 2007: 42). 또한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 여성이 수행하는 "모성노동, 가사노동, 섹스노동을 비생산적이고 생산에 부차적이라는 의미의 재생산 노동이 아니라 인간을 생산하고 쾌락을 생산하는 생산노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노동들을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로 의미화하기 위한 것이다(고정갑희, 2007: 26).

10) "자신들의 삶을 매일매일 재생산하는 인간은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것... 최초의 인류 이래...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 이 둘 모두를 포함한 생명의 생산은... 이중의 관계로, 즉 한편으로는 자연적 관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Marx and Engels, 1988: 57-58). "역사에서 결정적 계기는 직접적 생활의 생산 및 재생산이다. 그 하나는 생활수단, 즉 의식주의 대상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그 자체의 생산, 즉 종족의 번식이다"(Engels, 1987: 6).

11) 에드홀름(Edholm)과 해리스(Harris) 그리고 영(Young)은 재생산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주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력 재생산, 인간 또는 생물학적 재생산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Edholm, Harris, Young, 1977; Barrett, 1995: 35 재인용). 이 가운데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가사노동, 양육노동 등의 노동력 재생산노동과 임신·출산이라는 인간 또는 생물학적 재생산 노동을 분석하였고, 재생산 영역에 대한 재이론화를 통해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던 맑스주의자들은 주로 가족, 학교, 종교 등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활용한 자본주의의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다루었다.

맑스주의 페미니스트인 포르투나티는 이미 오래 전에 가사노동, 출산노동과 같은 재생산 노동을 가치를 발생시키는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Fortunati, 1997).

임신·출산을 재생산 영역으로만 규정하고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로 의미화 하지 않는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의 노동 개념의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정치경제학에서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가정 안의 일이 창조적인 노동과정으로 표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자연과 본능의 비경제학적인 세계로 분류되었다”(Ferber and Nelson ed. 1993: 140).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 노동은 가정 밖에서 자본에 고용되어 물질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임금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가정 안에서 수행되는 임신·출산은 비생산, 무임금의 영역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자본에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생산하는 일이며 임금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¹²⁾

임신·출산이 비생산적이고 비가치적인 부활노동으로 규정되는 것은 신생식기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여성주체들의 노동참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몸들을 의과학적 연구의 자원으로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과 연동된다. 또한 모성이나 양육의 사회적 보장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출산과 교육시장의 개별적인 소비자로서만 위치 지워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화된 임신·출산의 수행은 사회적 생산노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는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모성적 몸들이 단지 가족구성원을 늘리는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력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개인의 소비적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소비도 “사회적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논의(Baudrillard, 1991: 111)와 생산이 물질적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을 넘어 사회화 되었으며 생산적 노동의 형태와 성격이 점점 협업화되고 비물질적으로 된다는 논의(Negri and Hardt, 2001)를 끌어들이려 한다.¹³⁾

특히 네그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 노동의 협업적 특성은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생산력이 되어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몸들의 지식노동참여와 생산성에 주목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의과학자 집단이나 관련 산업이 그러한 “사회적 협업의 과정이나 형태 및 산물을 어떻게 장악하고 수취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해 준다(윤수중, 2002: 63).¹⁴⁾

즉 출산을 수행하는 몸들은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의과학적 지식구성예의 노동참여를 통해 사회적 생산력에 연결된다. 또한 기술화된 출산과정은 의료진과의 소통적, 상호작용적 노동뿐만 아니라 네그리가 말하는 정서적 노동과 비슷한 맥락에서 수많은 감정노동이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다.¹⁵⁾

따라서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여성주체와 몸들은 생식과 관련한 의과학적 지식이나 정보의 구성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거나 그것에 수동적으로 순응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체험과 해석, 그리고 몸의 물질성의 구성과정을 통해 의과학적 지식생산에 기여하고 개입한다.

12) 대리모나 생식세포 판매자의 모성노동은 위탁부모 및 수요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경우에는 위탁부모나 수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대가가 일종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13) 네그리는 이를 사회적 공장, 사회적 노동자로 설명한다. 이제 생산은 사회적 생산으로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라는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소통, 관계, 삶 형태의 생산이라는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그리의 이러한 문제설정은 주체성 생산과 연결되는데, 전통적 노동계급이 산업노동자와 임금노동자만을 지칭했다면 전업주부, 학생, 실업자, 환자 등도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는 생산적 주체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드리야르는 몸을 적극적으로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본주의에 종속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네그리는 몸을 스피노자의 역능 개념을 끌어들이어 구성·재구성하는 생성적 힘으로 설명한다. 네그리의 생산적 노동의 성격 변화 및 비물질적 노동에 대한 설명은 Negri and Hardt, 2001: 61-62를 참조. 여기서 네그리는 비물질적 노동을 소통적 노동, 상호작용적 노동, 정서적 노동으로 제시한다.

14)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생산된 지식에 대해 특정 과학기술자나 기업에 배타적인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허제도에 대해 네그리는 바로 이 생산의 공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에 의해 침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Negri and Hardt, 2008: 223-233). 따라서 네그리에게서 과학적 지식은 생산적 몸들의 사회적 협업을 통해서 구성되며 “공통의 부(common wealth)”로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Negri and Hardt, 2009).

15) 최근에 돌봄노동이나 감정노동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사회적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나 감정노동을 요구받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감정 관리 및 감정의 상품화 문제를 다룬다(Hochschild, 2003).

모성적 몸 체험성을 통해 생산된 지식은 기술생명권력의 작동에 의해 비과학, 비공식적인 지식으로 배제, 폄하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식과 관련한 의과학적 지식은 의료진과 모성적 몸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이다. 신생식기술을 이용한 생명의 생산 역시 의료진과 모성적 몸들의 협업 결과이다. 또한 신생식기술과 의과학적 지식은 완전하다기 보다는 모성적 몸들을 통해 불완전성이 드러나며 불완전성은 의과학적 연구를 추동하는 힘이 된다.

재생산/생산의 이분법을 비판하며 생산에 대비해 재생산에 부여된 부차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그 가치와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을 괄호를 붙여 (재)생산 노동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임신·출산의 생산성이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시장에서 교환가치화 되는 생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화된 출산의 수행을 통해 생산하는 관계와 소통, 지식, 삶의 형태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임신·출산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과학적 지식생산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성과 가치를 수취당함으로써 신생식기술의 통제권을 박탈당하고 객체, 수혜자로서만 위치지워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기술화된 출산수행은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노동이라는 개념에 부착되어 있는 경제적 의미의 생산성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리모나 생식세포 판매 여성의 계약에 의한 기술화된 출산노동은 몸들과 출산이 자본화 되고 위탁부부나 구매자에게 받는 금전적 대가가 일종의 임금의 형태가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의 생명생산 노동이다. 생명생산을 수행하기 위해 대리모나 생식세포를 구매한 여성들은 소비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생식세포와 자궁을 이용해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난임여성들과 생식세포 공여 및 판매 여성, 그리고 대리모 여성은 모성노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¹⁶⁾

하지만 모든 출산은 생명생산과 연결되고 기술화된 출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의 몸들은 의과학적 지식 생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생산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노동을 관계나 소통, 삶의 방식의 생산을 포함하는 사회적 노동 개념으로 확장시키면 생산과 재생산, 노동과 활동(activity)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들의 임신·출산을 그 수행과정에서의 생산성과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재)생산 노동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주체성(난임여성, 장애여성 등)을 드러내는 것과 연동된다.

또한 여성들이 임신·출산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기술과학의 개입이라는 변화하는 출산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본과 권력이 몸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들의 생산적 노동 참여가 통제와 착취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해러웨이가 말했던 몸들의 물질성의 변화에 주목해 역사적으로 다른 종류의 몸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이고 다른 방식의 모성과 신생식기술의 정치를 구상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4. (재)생산 정치의 문제설정

신생식기술과 모성성을 여성들의 입장에서 정치화할 때 기존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¹⁷⁾ 확보를 쟁점으로 제기해 온 (재)생산의 정치는 몇 가지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생산권의 내용과 강조점은 변화하는 출산환경과 여성들의 상이한 목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재)생산권은 보편적 권리이거나 자유주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비판적으로 구성,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Ehrenreich ed, 2008).

16) 출산과정에서의 기술과학의 개입은 모성의 분화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노동의 내용과 사회적 성격, 그리고 각각의 모성의 사회적 위치까지도 복잡하게 분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성 노동의 이론적 범주화와 개념설정에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7) 재생산권이란 여성이 임신출산, 피임, 낙태 등의 재생산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져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1960, 70년대 서구 여성운동을 통해 주창되었다. 이 개념은 점차 여성의 성적 권리와 몸에 대한 통제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1994년 국제인구발전회의(ICPD)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거치면서 재생산 건강권(reproductive health right)이라는 개념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통용되었다(조영미, 2004: 9-10).

첫째, 몸의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입각해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bodily self-determination)과 출산과정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재)생산권의 문제설정에 관한 것이다(Petchesky and Judd, 1998). 페미니스트들은 생명체의 발생과 성장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임신·출산, 피임, 낙태 등 생식과 관련한 문제를 여성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생식기술, 특히 신생식기술과 유전공학을 비롯한 생명공학은 여성 몸의 통합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여성 몸의 통합성은 주로 기술과학적 개입으로 인한 몸의 분절화와 비정상화에 대한 비판(Handwerker, 1995; 조주현, 2006)으로 이어졌고, 몸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위해 출산과정의 통제권이 여성에게서 의료전문가로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권력을 문제화하였다.

문제는 몸의 통합성인데, 그것이 더 이상 자기결정권과 통제권 확보를 위한 논거가 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즉 몸의 위치와 물질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특히 신생식기술과학의 개입을 통한 임신·출산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체의 수정 및 배양이 여성의 유기체적 몸이 아니라 실험실로 이전되었으며 생식세포의 수정력과 수정란의 착상력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출산과정의 통제권에 대한 주장은 여성의 유기체적 몸을 넘어서 분자적 몸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분자적 몸들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과학자들의 노동력만을 다루는 것도 제한적이다. 수정 및 배양이 실험실로 이전되었다는 것과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생명생산의 과정이 의과학자들의 기술적 처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생명생산의 생산적 힘이 의과학자들의 지식과 기술로부터 온다고 의미화 됨으로써 기술과학주의를 더욱 조장하고 모성적 몸들의 노동참여와 생산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빼내고 수정, 배양하는 것은 의과학자들의 노동이지만 그것이 임신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난자의 질이 관건이 된다.

신생식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난임여성들은 소위 '건강한' 난자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몸 관리를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체의 생산은 난임여성들과 의과학자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생산력의 궁극적인 출처는 난임여성들의 몸들이다. 따라서 신생식기술과 그것의 개입을 통한 출산과정의 통제권은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생식기술이 여성의 몸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협이나 모성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여성의 몸들이 의과학적 지식과 생명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궁극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둘째, 모성적 욕망에 대한 문제설정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성을 본능으로 규정해 여성을 억압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저항하기 위해 가부장제에 의해 강요되는 모성이테올로기를 비판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이는 의도치 않게 모성적 욕망을 외적 강요로만 환원함으로써 모성적 주체를 객체화하며 무엇보다도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모성적 욕망은 결핍이나 아이에 대한 필요나 확산, 요구와는 분명히 구별되며 그것들로 환원할 수 없다(Moro, 2009: 157). 따라서 모성적 욕망을 생득적인 본능이나 외적 강요의 내면화로 환원하기 보다는 여성들의 몸적, 사회적 위치에서 모성적 욕망이 생성되는 다차원적인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욕망을 생성적 과정이며 생산하는 힘으로 설명한 들뢰즈·가타리의 욕망론과 되기(becoming)이론은 난임여성들의 모성적 욕망과 주체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Deleuze and Guattari, 2000; Guattari, 1998).¹⁸⁾

이는 권력과 자본이 표준적인 모성상과 수행방식을 만들어내는 과정뿐만 아니라 난임여성들이 그것들로부터 탈주하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인 건강권의 모순에 관한 것인데, 이는 의료적 접근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의료적 개입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불임기술의 위험성과 불완전성, 관련 정보의 고지 부재, 그로 인한 여성 건강권의 침해 등을 비판해 왔다. 즉 의료적 개입으로 인한 여성건강침해에 주목해 온 것이다.

18) 들뢰즈와 가타리는 『앙파-오이디푸스』에서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이 욕망을 결핍으로 상정하고 오이디푸스적 가족감각 구조 안에 가둬버린다고 비판함으로써 욕망을 생성으로, 사회적 욕망으로 확장시킨다(Deleuze and Guattari, 2000). 즉 욕망을 “충동적 에너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Guattari, 2004: 320). 욕망에 대한 이러한 문제설정을 바탕으로 가타리는 표준화된 인간상을 제시하고 내면화하려는 권력으로부터 탈주하는 욕망투쟁을 제안한다(Guattari, 1998). 혁명은 일상생활에서부터의 욕망투쟁을 통해 발생하며 욕망투쟁은 사회적 소수자 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들뢰즈·가타리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난임여성 되기를 통해 기술생명권력이 난임여성들에게 전형화된 모성상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내면화하려는 과정뿐만 아니라 난임여성들의 집단적 욕망투쟁이 이것들을 어떻게 변형시켜 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재)생산권의 내용이 확장되어 온 역사를 보면 이러한 모순은 여성들의 몸적, 사회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피임권과 낙태권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여성들의 출산거부 운동이 한창일 때 가난한 흑인여성들과 유색인종여성들은 의료적 서비스를 이용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권리를 주장했고 (재)생산권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Nelson, 2003).

난임여성들이나 장애여성들의 경우에도,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의료적 개입으로 인한 건강침해와 의료적 접근권과의 관계에서 의료적 접근권에 우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난임여성들이 불임시술과정이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몸에서 발견되는 위험징후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난임여성들은 의사들의 권유와 상관없이 불임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 간격을 넓히는 등의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생산권의 내용은 모든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으며 여성들의 몸적, 사회적 위치와 조건들에 따라 그 강조점과 지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재)생산권을 페미니즘적으로 정치화 하는 것은 그들의 몸적, 사회적 조건들과 상황성에 따라 (재)생산권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재)생산권은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어야 할 정치적 장이 된다.

| 참고문헌 |

- Tong, R. 1995. 이소영 역.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원제: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 Firestone, S. 1970. The Dialectic of Sex: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 Bantam Books. (국역: 성의 변증법).
- O'Brien, Mary. 1983.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Routledge.
- Rich, A. 1976. Of Woman Born -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W.W,Norton & Company. (역서: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 배은경. 2005.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 역사』, 통권67호, pp.260- 299. 문학과지성사.
- Irigaray, L. 2000.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원제: Ce sexe qui n'en est pas un).
- 태혜숙. 2007. 「대항지구화와 여성주의 주체생산 모델: 몸-섹슈얼리티-노동-자본-자연」. 『여성이론』, 통권 제17호, (2007년 겨울), pp.32-51. 여이연.
- Braidotti, Rosi. 2004.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여이연. (원제: Nomadic Subject).
- Grosz, E. 2001. 임옥희 역. 『뒤틀린 몸』. 여이연. (원제: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 Haraway, Donna J. 2002. 민경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원제: Simians, Cyborgs and Women).
- _____. 2003. The Haraway Reader. Routledge.
- Butler, Judith. 2008.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원제: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 Balsamo, A. 1996.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Duke University Press. (김경례 역. 2012. 『젠더화된 몸의 기술 -사이보그 여성읽기』.아르케.)
- Spar, L. Debora. 2007. 심재관 역. 『베이비 비즈니스』. 한스미디어. (원제: The Baby Business).
- Marx, K and F. Engels. 1988. 박재희 역. 『독일 이데올로기』. 청년사. (원제: Die Deutsche Ideologie).
- Engels, F. 1987. 김대웅 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원제: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 이상화. 1988.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의 변증법 : 재생산 노동에 관한 시론적 일 고찰」. 『한국여성학 4』, (88.10),

pp.7-26. 한국여성학회.

- Althusser, L. 2007. 김웅권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원제: “Idéologie et Appareils Idéologiques D'état”, in Sur La Reproduction).
- Bourdieu, Pierre. 2000. 이상호 역.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동문선. (원제: La reproduction. Éléments pour une théorie du système d'enseignement).
- Jagger, A. 1999. 공미혜·이한옥 역. 『여성해방론과 인간본성』. 이론과실천. (원제: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 Edholm, Felicity and Olivis Harris, Kate Young. 1997. “Conceptualizing Women” in Critique of Anthropology, nos.9/10.
- Barrett, Michèle. 1995. 신현옥 외 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여성사. (원제: Women's oppression today: Problems in Marxist feminist analysis).
- 고정갑희. 2007. 「여성주의 이론생산과 여성운동, 사회운동: 가부장체제의 사막에서 이론의 오아시스를 찾아나간다」. 『여/성이론』, 통권 17호. 여이연.
- Fortunati, Leopoldina. 1997. 윤수중 역. 『재생산의 비밀』. 박종철출판사. (원제: L'arcano della riproduzione: Casalinghe, prostitute, operai e capitale).
- Ferber, M. A. and J. Nelson. 1993. Beyond Economic Man: Feminist Theory and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국역: 남성들의 경제학을 넘어서).
- Baudrillard, Jean. 1991.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원제: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Negri, A. and M. Hardt. 2001.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원제: Empire).
- _____. 2008. 조정환 외 역. 『다중』. 세종서적. (원제: Multitude).
- _____. 2009. Common Wealth: : Economics for a Crowded Planet. Harvard Univ. (역서: 공동체: 자본과 국가너머의 세계).
- 윤수중. 2002. 『자유의 공간을 찾아서』. 문화과학사.
- Ehrenreich, N(ed.). 2008. The Reproductive Rights Reader. New York Univ.
- Petchesky, R. and K. Judd. 1998. Negotiating Reproductive Rights: Women's Perspective Across Countries and Cultures. Zed Books.
- Handwerker, L. 1995. “The Hen That Can't Lay an Egg: Conceptions of Female Infertility in Modern China,” in Terry, J. & J. Urla, Deviant Bodies. Indiana University Press.
- 조주현. 2006. 「난자: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한국여성학』, 제22집 제2호, pp.5-40. 한국여성학회.
- 조영미. 2004. 「출산의 의료화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Moro, M. R. 2009. 김성희 역. 「욕망에 관한 짧은 이야기」. 『성의 역사와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망』. 알마. (원제: “Petite histoire sur le désir”, in Pierre Jouannet et al, Histoires de Sexe et Désir D'enfant).
- Deleuze, G. and Felix Guattari. 2000. 최명관 역.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원제: L'Anti-Oedipe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 Guattari, Félix. 1998. 윤수중 역. 『분자혁명』. 푸른숲. (원제: La révolution moléculaire).
- _____. 2004. 「권력구성체의 적분으로서 자본」. 윤수중 편역. 『가타리가 실천하는 욕망과 혁명』. 문화과학사. (원제: “Le Capital comme Intégrale des Formations de Pouvoir”, in La Révolution Moléculaire).
- Nelson, J. A. 2003. Women of Color and the Reproductive Rights Movem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그들은 왜 그렇게 무자비 할 수 밖에 없었던가?”
“또 다른 그들은 왜 무모함을 알면서도 그 무자비함
에 맞설 수 밖에 없었던 걸까?”

소년이 온다

저자: 한강
출판사: 창비
출판일: 2014.05.19

이 소설의 작가는 “한강”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명성을 얻은 작가이다. 이 명성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작가’라는 타이틀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타이틀을 얻은 작가가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한강은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내놓았을 때부터, ‘치밀하고 빈틈없는 세부, 비약이나 단절이 없는 긴밀한 서사 구성, 풍부한 상징과 삽화들 같은 미덕으로 한 젊은 마이스터의 탄생을 예감케 한다’는 파격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오늘 소개할 책『소년이 온다』는 한강의 여섯 번째 소설이다. 우리 지역의 아픔이 담겨있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의 시간을 소설에 담았다. 이 소설 속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창비문학블로그 ‘창문’에서 연재했던 작품으로 지금까지의 작품세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저자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_ 출판사 책소개

책을 손에 잡고 읽고 참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광주에서 살아가면서 5.18과 관련해 참 많은 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으로 사진과 증언으로만 그때를 상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책의 힘일까? 작가 한강의 능력일까? 한줄 한줄 책을 읽으면서 가슴 한 칸이 먹먹해지며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한강의 문장은 그 날 이후 수많은 역사 중에 하나의 기억으로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지금도 쓰여질 부분이 너무 많기에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듯 하다.

소설 속 주인공 동호는 당시 중학교 3학년 소년이다. 시위 현장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합동분양소가 차려진 도청 상무관에서 고등학생 누나들과 함께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는다. 매일같이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며 말 없는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던 그는 시신들 사이에서 눈앞에서 허망하게 보낸 친구 정대의 처참한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 날 도청, 너무 어리다며 돌아가라는 형과 누나들 몰래 동호는 그 자리에 남게 되고, 5·18 이후 경찰에 연행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살아 있다는 것을 차욕스러운 고통으로 여기기며 무력감에 빠진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중략)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언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룰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 소년이 온다 中 p.114

그 양심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대근교수

|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전문위원 |

정대근 문헌정보학 박사,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소장,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권은비 생활과학 박사,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강사, 사회복지법인 권동식아벤티노재단 사무국장
김경례 사회학 박사,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김란희 여성학 석사,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
김수환 도시계획 박사, 광주남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영미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종완 평생교육학 석사,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사무처장
김태호 행정학 박사수료,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기획실장
김해경 미술학 박사,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
김 현 철학 박사,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박경동 사회학 박사수료, 광주문화재단 팀장
박철희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BK사업팀 학술연구교수
서승호 사회복지학 학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총괄매니저
선봉규 정치학 박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안수창 공학 박사, 한국광기술원 기술사업화팀 책임연구원
오창민 사회학 박사수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상임이사
윤영선 경제학 박사수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대표
윤희철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이숙영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주)좋은친구들 기획이사
이철승 경영학 박사, 광주지역사업평가단 팀장
임남수 법학 박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책임연구원
전창진 도시지역개발학 부동산학 박사, 광주송정역세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정은주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초빙객원교수
주문희 교육학 박사,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최지혜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최혜원 전기공학 박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실 선임연구원
홍성운 행정학 박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2020.09. Vol.2 No.3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발행처 더함 경제문화연구소(북더함)

발행일 2020.09.16

편집인 정대근·김정훈

디자인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101-6

전화 062.431.6339 FAX 062.262.6340

<http://www.eccplus.co.kr>

ISSN 2672-2013